연구자료 D207 | 2006. 3.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 동 원 부 연 구 위 원
박 혜 진 연 구 조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효율적인 농정여론 수집을 위해 현지통신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연구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당해 연도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최근 10년간의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방농업시대 농촌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주요 농정 이슈로 다루어졌던 쌀 재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이를 감안해 쌀산업 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변화와 대응의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쌀산업 발전 대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수입 농산물 증가와 국민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대응 실태를 조사를 포함해 이들의 정책수요는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이 조사 보고서가 농정의 1차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농업정책 연구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현지통신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6.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680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것이다.

○ 조사 결과,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10명 중 1명(9.5%)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7.5%)는 그 요인을 '교육여건 열악'(26.2%),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5%), '복지시설 미흡'(18.7%), '주거 환경의 열악'(16.2%) 등을 꼽았다.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7.1%로 전년(20.5%)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등 2002년 7.6%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 20%대를 넘은데 이어 2005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수매제폐지 등의 영향으로 '추곡수매'가 26.9%로 가장높은 비율 차지했으며, 2003년부터 급격히 관심이 증가해 온 '농산물 수입개방'도 25%대를 유지하였다. 반면, '영농자금 농가부채'는 9.5%로 낮아져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 수를 기록함으로써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은 '농촌인력 부족'(21.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21.4%),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13.0%),

‘농산물 수입개방’(1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해 과반수 가까이(47.6%)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52.9%가 ‘수입쌀 시판’을 꼽아 가장 큰불안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급한 대책으로는 63.0%가 ‘소득 보전 방안’ 꼽았다.

○ 농업인 59.7%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은 ‘전국 동일가격 적용’(60.2%)을 ‘지역별 가격 적용’(33.7%)보다 뚜렷이 선호하였다.

○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정책(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대 등)’을 최우선으로(67.9%)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촌정책’(17.4%), ‘농업정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119조원 투융자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20.0%로 나타났으며, 38.5%는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6%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투융자사업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분야로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최우선으로(12.3%)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9.9%), ‘농업기계화 · 시설현대화 지원’(9.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2005년 역점 추진한 쌀산업정책 중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대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에서는 '복지기반 확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 1,976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60.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 이유로 ' 좋은 교육 환경으로 질 높은 수업'을 과반수인 60.7%가 꼽았다.

○ 농사의 일부라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68.7%)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전략'(15.8%), '환경오염 감소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의 인식정도는, 과반수인 64.9%가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했으나, 소득변화는 '비슷하다' 또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려면 가격 차별화와 함께 유통망 확충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는 각 63.2%, 63.1%로 나타났고,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10명 중 6명(66.6%)이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농림부 명칭은 응답자 절반가까이(48.1%)가 '농업·생명산업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는 농업인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른다'(36.9%),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9.3)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2005년도 조사를 통해 DDA농업협상 논의 진전과 한-칠레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상,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 쌀 시판 문제 등이 이슈로 다뤘으며,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수준과 직업만족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농업인들은 쌀 관세화 개방 10년 유예라는 쌀 재협상 결과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면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쌀 시판'이 현실화된 것을 가장 큰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방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런 가운데서도 농업인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쌀산업 대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융자사업은 직접지불제 확대 등 소득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 같은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각종 농업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2005 Poll Result on Farmers' Attitude Changes and Pending Problems

This public poll was conducted by mailing out questionnaires to 2,000 correspondents in local areas by the Korea Farming Village Economy Research Institute and analyzing 680 research tables of respondents.

As a research result, as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farming life of farming population, about 1 out of 10 respondents (9.5%) answered ‘satisfied’, which is a similar level from that of the previous year.

As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farming, 17.1% of respondents answered ‘satisfied’, which is a bit lower than that of the previous year (20.5%).

As for interests related to farming, ‘a purchase of autumnal harvest grain by the government' posted the highest ratio of 26.9% due to the influence of the abolishment of the purchase system, and ‘the start of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maintained 25%.

As for difficulties in farming, ‘insufficient farm workers’ was proven the highest (21.6%), and ‘unstable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21.4%) was the next.

As for an understanding on the delay of the imposition on customs on rice, nearly half the respondents (47.6%) answered it was an ‘unavoidable selection’ for the ratification for the negotiation over rice which was done by the National Assembly.

59.7% of respondents expected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eserving income gained from selling rice’ to be helpful in stabilizing the farming household income. As for the way of the application of purchase price to the public savings for emergency, ‘the application of the same price nationwide’ (60.2%) was clearly preferred to ‘the application of price by region’(33.7%).

As for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be intensively focused on, ‘income policy’ was proven the highest (67.9%), and then, ‘farming village policy’(17.4%) and ‘farming policy’ (14.7%) followed.

As for the area that is hoped to be extended for investment and financing, ‘the execution of diverse direct payment systems’ was chosen to be the most imperative (12.3%, and ‘the reduction of burden by supporting pensions for farming population’ (9.9%) was the next.

The ‘income stabilization policy for rice farming households, such as the execu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eserving income gained from selling rice’ was valued highest(3.2 points) of the rice industry policies intensively pursued in 2005.

As for a plan of closing/integrating 1,976 small-scal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y 2009, more than half the respondents (60.2%) answered ‘agreed’ to it.

67.2% respondents answered they are performing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as for the reason, 68.2% respondents replied they want to secure trust from consumers by producing safe eateries.

As for food safety management affairs, 6 out of 10 respondents insisted that ‘they should be wholly organized and arrang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nearly half the respondents (48.1%) preferre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Science’ as its new name.

Researchers: Dong-Weon Kim and Hye-Jin Park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frog78@krei.re.kr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1
2. 조사 방법 ····· 2
3. 자료처리 및 분석 ····· 4

제2장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의식 ····· 5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 12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 18

제3장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쌀산업에 대한 의식

1.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인식 및 대응 ····· 24
2. 쌀산업 대책에 대한 견해 ····· 30

제4장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1. 주요 농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 ····· 33
2.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42

제5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55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 57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 73

부록·조사표 ····· 81

참고 문헌 ····· 91

표 차 례

제1장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3

제2장

표 2-1. 5년 전과 비교한 2005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 6
표 2-2. 전년과 비교한 2005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 7
표 2-3. 5년 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인식 연도별 변화('94-'05) ····· 8
표 2-4. 2005년과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 9
표 2-5. 도시와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 10
표 2-6. 5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연도별 변화('95-'05) ····· 10
표 2-7.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 12
표 2-8.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 ····· 13
표 2-9.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 정도 ····· 14
표 2-10. 농업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 14
표 2-11.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 ····· 15
표 2-12. 농촌에서의 거주 여부 ····· 16
표 2-13.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 17
표 2-14. 농촌을 떠나는 시기 ····· 17
표 2-15.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연도별 변화(복수 응답) ····· 19
표 2-16.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복수 응답) ····· 21
표 2-17. 1년 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 22

제3장

표 3-1.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인식 ····· 25
표 3-2. 쌀 관세화 유예로 가장 기대되는 것 ····· 26
표 3-3. 쌀 관세화 유예로 가장 우려되는 것 ····· 26
표 3-4. 쌀 관세화 유예 이후 가장 시급한 대책 ····· 27

표 3-5.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자구책 ····· 28
표 3-6. 2006년 벼 재배면적 의향 ····· 29
표 3-7.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반응 ····· 30
표 3-8. 바람직한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 방식 ····· 31
표 3-9. 선호하는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 방식 ····· 32

제4장

표 4-1.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34
표 4-2. 현정부의 출범 초기와 현재의 농업에 대한 인식정도 ····· 34
표 4-3.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 35
표 4-4. 119조원 투융자 사업 추진에 대한 반응 ····· 36
표 4-5. 농업정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인식정도 ····· 37
표 4-6. 향후 투융자가 확대되길 바라는 사업 ····· 38
표 4-7. 쌀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순 ····· 39
표 4-8.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평가 ····· 39
표 4-9.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한 인식정도 ····· 40
표 4-10.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 41
표 4-11.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 41
표 4-12.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 43
표 4-13.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 44
표 4-14. 친환경농산물 재배 기준에 대한 인식정도 ····· 45
표 4-15.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 정도 ····· 46
표 4-16. 친환경농업 실천 후 소득변화 정도 ····· 47
표 4-17. 친환경농업 실천시 애로사항 ····· 48
표 4-18. 친환경농산물 영농규모 확대의향 ····· 48
표 4-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인지도 ····· 49
표 4-20.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참여의향 ····· 50
표 4-2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지도 ····· 51
표 4-2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참여의향 ····· 52
표 4-23. 식품안전관리 부처의 개편에 대한 의견 ····· 53
표 4-24. 농림부로의 일원화시 부처 명칭 의견 ····· 54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과거와 비교한 현재(2005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 7
그림 2-2.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인식과 기대 변화 ····· 11
그림 2-3. UR출범 이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 15
그림 2-4.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 변화 ····· 20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원 이래 운영해 온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당해 연도 농업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농업인의 의식 변화를 파악해 오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해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하고 있다.

○ 2005년도 조사는 의식변화와 함께, 쌀관세화 개방 유예 확정에 따른 쌀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대응의지를 파악하였고, 농업·농촌종합대책 등 주요 농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 친환경·식품안전 수요에 대한 농가의 대응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 조사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680건(유효응답률 34.0%)의 조사표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조사 문항 구성

○ 조사문항은 농업인 의식 변화에 대한 부분 11문항,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쌀산업에 대한 인식 9문항,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12문항,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10문항 등 42문항과 응답자 특성 파악을 위한 8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설계하였다.

2.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분석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144명(1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이 54.7%, 60세 미만이 45.3%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형태별로는 준산간이 47.0%로 가장 많았다.

○ 응답자의 영농규모는 0.5～1ha 미만이 2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분포는 중졸(28.1%)과 고졸(45.2%)이 대다수였고, 대졸(퇴) 이상도 10.2%(71명)가 응답하였다.

○ 주 소득작목별 분포는 수도작이 4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수(13.6%), 축산(11.3%), 시설원예(11.1%), 특작(7.0%)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연간 소득규모는 2천만원 미만이 65.2%, 2천만원 이상이 34.8%로 나타났다[1].

---

1) 조사 대상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모범 농업인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 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이들이 그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율(%)
지역	강원	65	8.0
	경기	79	9.7
	경남	123	15.1
	경북	126	15.5
	전남	144	17.7
	전북	85	10.5
	제주	13	1.6
	충남	112	13.8
	충북	66	8.1
지대별형태	평야지대	151	21.8
	산간지대	156	22.5
	준산간지대	325	47.0
	도시근교	60	8.7
연령	60세미만	316	45.3
	60세이상	382	54.7
학력	한학	9	1.3
	국졸	106	15.2
	중졸	196	28.1
	고졸	315	45.2
	대졸(퇴)이상	71	10.2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451	65.2
	2천만원이상	241	34.8
영농경력	10년미만	6	0.9
	10～20년미만	49	7.0
	20년이상	645	92.1
경작규모	0.5ha미만	46	6.6
	0.5~1ha미만	187	26.8
	1.0~1.5ha미만	156	22.3
	1.5~2ha미만	121	17.3
	2~3ha미만	86	12.3
	3ha이상	102	14.6
주재배작목	수도작	330	47.4
	과수	95	13.6
	노지채소	48	6.9
	축산	79	11.3
	시설원예	77	11.1
	특작	49	7.0
	기타	18	2.6

3.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초 통계 처리하였고, Excel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 분석 방법은 전반적인 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농정평가 등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연령·경작규모・학력・소득 등을 독립변인으로 교차분석해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또, 이번 조사 결과와 ’93년 이후 조사 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제 2 장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농촌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농사와 관련해 어떤 요인이 경영에 특이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봄으로써 당해 연도의 농업 여건을 가늠하고, 차기 연도 농업정책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둬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농업인의식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의식

○ 농업인들은 현재의 농촌생활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연도별 변화 경향 분석을 통해 개방농정기라고 할 수 있는 최근 10년간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1.1.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인식과 기대

○ 현재의 농촌 생활수준을 5년전과 비교한 의식을 살펴보면, 농업인 17.0%는 2005년 농촌의 생활수준이 '5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합산)'고 응답해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조사 결과에 비해 3.3%p 낮아졌으며, 반수를 넘는(55.2%) 응답자는 '나빠졌다(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합산)'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히 뚜렷하였다.

○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자의 소득 분포는 2천만원 미만계층에서 2천만원 이상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보다 60세 미만의 계층에서 뚜렷이 나타나 소득이 낮고 젊은 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 5년 전과 비교한 2005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n=680, 단위 : 명, %)

	매우좋아졌다		약간좋아졌다		마찬가지		약간나빠짐		매우나빠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	0.6	55	17.6	99	31.7	77	24.7	79	25.3	312
60세이상	6	1.6	52	14.2	89	24.4	139	38.1	79	21.6	365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4	0.9	57	13.0	114	25.9	151	34.3	114	25.9	440
2천만원이상	4	1.7	50	21.1	74	31.2	65	27.4	44	18.6	237
계	**8**	**1.2**	**107**	**15.8**	**188**	**27.8**	**216**	**31.9**	**158**	**23.3**	**677**

○ 전년(2004년) 생활과 비교해서는, 농촌의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매우 좋아짐, 약간좋아짐 합산)'는 응답이 5.2%로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전년(10.2%) 보다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2배 이상 줄었다.

○ 생활수준이 전년에 비해 '못해졌다'(약간, 매우 못해짐 합산)는 응답은 63.8%로 전년보다 17.1%p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 나빠졌다’는 인식은 60세 이상,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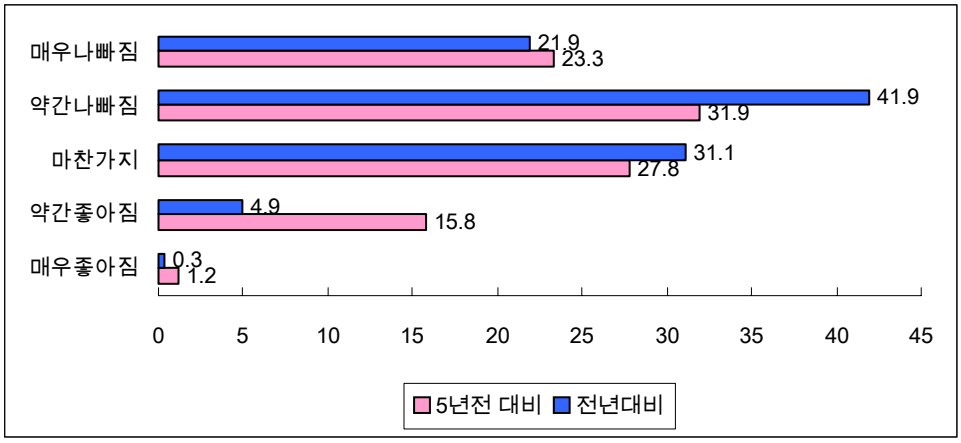
표 2-2. 전년과 비교한 2005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n=680, 단위 : 명, %)

	매우좋아졌다		약간좋아졌다		마찬가지		약간나빠짐		매우나빠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	0.3	16	5.1	102	32.7	125	40.1	68	21.8	312
60세이상	1	0.3	17	4.7	108	29.7	158	43.4	80	22.0	364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1	0.2	18	4.1	125	28.5	192	43.7	103	23.5	439
2천만원이상	1	0.4	15	6.3	85	35.9	91	38.4	45	19.0	237
계	**2**	**0.3**	**33**	**4.9**	**210**	**31.1**	**283**	**41.9**	**148**	**21.9**	**676**

○ 2005년에 농업인들이 느끼는 5년 전 및 전년과 비교한 생활수준 인식은 2004년보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전 대비(17.0)보다 전년 대비(5.2%) 생활수준 향상 인식 비율이 2배(11.8%p) 이상 줄어들었다.

그림 2-1. 과거와 비교한 현재(2005년)의 농촌 생활수준 인식



○ 농업인들은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을 5년전과 비교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94년 이후 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현재의 생활수준을 5년전보다 향상되었다고(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합산) 응답한 비율은 ’94년부터 ’97년까지 40～6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UR 이후 농촌 투자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 이 같은 인식은 ’98년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자 긍정적인 인식이 하락해 2002년에는 16.4%로 최저치를 보였다가 다시 2003년에는 18.1%로 약간 상승하였고, 2004년에는 20%대까지(20.3%)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5년에는 다시 하락(17.0%)하는 경향을 보였다.

○ 5년 전에 비해 생활수준이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은 23.3%로 ’04년에 비해 8.1%p 높아져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

표 2-3. 5년 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인식 연도별 변화(’94-’05)

(단위: 명, %)

구분/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매우 좋아졌다	8(1.2)	2.1	1.3	1.4	2.9	1.4 13.7	2.9	3.9	6.4	7.8	7.4	8.0
약간 좋아졌다	107(15.8)	18.2	16.8	15.0	17.9		28.5	22.9	34.2	45.9	52.5	51.8
향상(소계)	115(17.0)	20.3	18.1	16.4	20.8	15.1	31.4	26.8	40.6	53.7	59.9	59.8
마찬가지이다	188(27.8)	31.0	32.4	33.4	30.6	31.6	36.8	26.7	28.1	30.8	29.6	28.9
약간 못해짐*	216(31.9)	33.5	29.5	29.6	29.0	27.7	22.7	30.5				
매우 나빠졌다	158(23.3)	15.2	20.1	20.6	19.6	25.6	9.1	16.0	31.1	15.5	10.5	11.3
합 계	677(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8년 조사 항목 신설(1994년～2005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1.2. 농업인들의 미래 농촌생활 수준 전망

○ 농업인들의 미래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농업인 비율은 전체의 6.8%로 전년(7.8%) 보다 1.0%p 소폭 감소하였으며,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도 74.5%로 전년(67.8%)보다 6.7%p 높아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60세 이상과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2005년과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n=680, 단위 : 명, %)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		현재보다 악화될 것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0	6.4	74	23.7	218	69.9	312
60세이상	26	7.2	52	14.3	285	78.5	363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25	5.7	75	17.2	337	77.1	437
2천만원이상	21	8.8	51	21.4	166	69.7	238
계	**46**	**6.8**	**126**	**18.7**	**503**	**74.5**	**675**

1.3. 도시생활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 인식

○ 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비교에서는 ‘도시보다 살기 좋을 것’(1.0%), ‘도시만큼 살게 될 것’(3.8%) 등 긍정적인 응답은 4.8%에 그친 반면, ‘도시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은 10명 중 8명(86.7%)을 상회할 정도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 ‘도시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60세 미만의 계층에서, 2.0ha 이상 영농규모 농가 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반면, 대다수인 86.7%는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고, 그 비율도 최근 2년간(2001년 93.1%, 2002년 94.0%)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3년(82.7%) 이후 약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다 2005년(86.7%)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5. 도시와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

(n=680, 단위 : 명, %)

	도시보다살기좋다		도시만큼		도시보다어렵다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3	1.0	9	2.9	277	89.1	22	7.1	311
60세이상	4	1.1	17	4.6	312	84.8	35	9.5	368
경작규모									
0.5ha미만	-	-	2	4.9	34	82.9	5	12.2	41
0.5～1ha 미만	2	1.1	8	4.4	147	81.7	23	12.8	180
1.0～1.5ha 미만	-	-	4	2.6	135	87.7	15	9.7	154
1.5～2.0ha 미만	2	1.7	7	5.8	105	87.5	6	5.0	120
2.0～3.0ha 미만	-	-	4	4.8	77	91.7	3	3.6	84
3.0ha 이상	3	3.0	1	1.0	91	91.0	5	5.0	100
계	**7**	**1.0**	**26**	**3.8**	**589**	**86.7**	**57**	**8.4**	**679**

○ 농업인들의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WTO 체제가 출범한 ’95년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이 29.9%로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99년까지 20～30%대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

○ 그러나 2000년 들어 갑자기 9.2%로 낮아진 이후 2001년 4.4%, 2002년에는 6.5%, 2003년 9.4%로 약간 상승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7.8%로 약간 줄었으며 2005년에는 6.8%로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표 2-6. 5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연도별 변화(’95-’05)

단위 : 명, %

구분/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현재보다 향상	46(6.8)	7.8	9.4	6.5	4.4	9.2	23.1	31.4	20.0	22.3	29.9
현재와 마찬가지	126(18.7)	24.4	24.1	19.6	14.6	25.7	38.0	36.9	27.5	37.3	36.9
현재보다 낙후	503(74.5)	67.8	66.5	73.9	81.0	65.1	38.9	31.7	52.5	40.3	33.2
합 계	675(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995년～2005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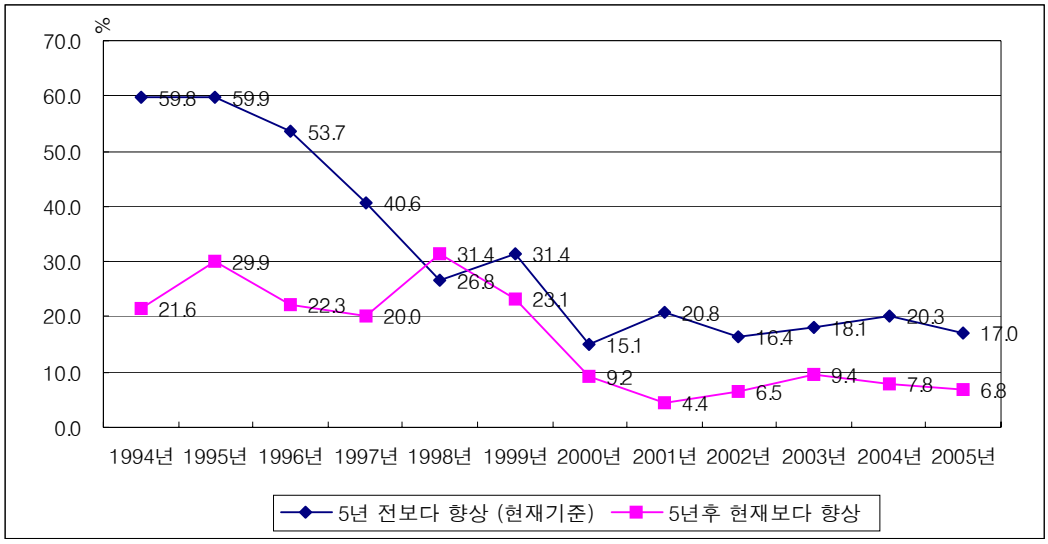
1.4. 농촌생활 수준 인식에 대한 변화 경향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현재시점 기준으로 5년전과 비교한 평가 및 5년 후 기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은 UR 협상 타결 직후인 '94년 60%선에서 출발해 1998년 IMF 이전 30~50%선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이후 20%선을 밑돌고 있다.

○ 5년 후 현재보다 향상되리라는 기대감도 IMF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10%선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전년보다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98년 IMF 이후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농산물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함께 농업조수입의 낮은 성장률과 농업경영비의 빠른 증가가 농업소득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5년 전과 5년 후 농촌 생활수준 인식과 기대 변화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 농업인들은 농촌이라는 지역개념의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살펴보고,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만족도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1.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는 응답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1.4%p 소폭 감소했으며, '불만(매우 불만 포함)'이라는 농업인 비율은 반수가 넘는 58.1%로 나타났다.

○ '만족한다'는 인식은 60세 미만 계층에서,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만족도와 소득구조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n=680, 단위 : 명,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	0.3	31	10.0	98	31.5	110	35.4	71	22.8	311
60세이상	9	2.5	23	6.3	122	33.2	121	33.0	92	25.1	367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	6	1.4	24	5.4	140	31.7	155	35.1	117	26.5	442
2천만원 이상	4	1.7	30	12.7	80	33.9	76	32.2	46	19.5	236
계	**10**	**1.5**	**54**	**8.0**	**220**	**32.4**	**231**	**34.1**	**163**	**24.0**	**678**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7.5%)는 불만족 요인으로 '교육여건 열악'을 가장 많이(26.2%) 꼽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5%), '복지시설 미흡'(18.7%), '주거

환경의 열악'(16.2%) 순으로 응답하였다.

○ 그 외 '기타'가 18.5%에 달하는 등 상기한 4개의 생활환경기반 외에 다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4개의 생활환경기반 부족을 비슷한 비율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생활 환경 전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인

(n=680, 단위 : 명, %)

	주거환경의열악		교육여건열악		복지시설미흡		일반인의 부정적인식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33	18.3	60	33.3	28	15.6	20	11.1	39	21.7	180
60세이상	30	14.3	42	20.0	45	21.4	60	28.6	33	15.7	210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40	14.9	70	26.0	52	19.3	57	21.2	50	18.6	269
2천만원이상	23	19.0	32	26.4	21	17.4	23	19.0	22	18.2	121
계	**63**	**16.2**	**102**	**26.2**	**73**	**18.7**	**80**	**20.5**	**72**	**18.5**	**390**

2.2. 농업종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

○ 농업인들은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은 17.1%로 전년에 비해 3.4%p 감소하였으며,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 포함)'는 응답은 47.5%로 전년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7.4%p 증가하였다.

○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인식에서 '매우 불만족' 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집단은, 연령대로는 60세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별로는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만족 정도

(n=680, 단위 : 명,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2	3.9	49	15.8	111	35.7	85	27.3	54	17.4	311
60세이상	11	3.0	44	12.0	129	35.1	100	27.2	83	22.6	367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8	1.8	43	9.7	160	36.2	123	27.8	108	24.4	442
2천만원이상	15	6.4	50	21.2	80	33.9	62	26.3	29	12.3	236
계	**23**	**3.4**	**93**	**13.7**	**240**	**35.4**	**185**	**27.3**	**137**	**20.2**	**678**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변화 추이를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놓고 보면, '99년 21.4%에서 2002년 7.6%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 15.8%를 기록하였다.

○ 다시 2004년도에는 20.5%로 집계됨으로써 '99년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으면서 최근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가 2005년에 다시 17.1%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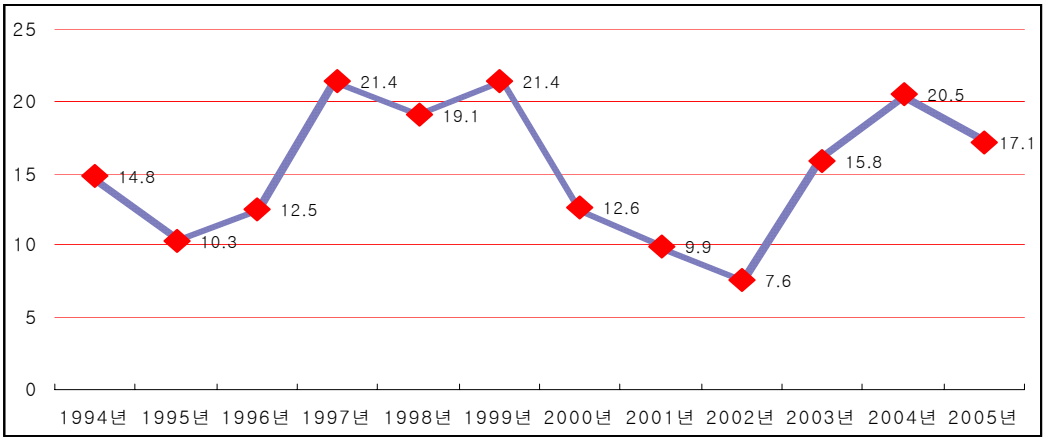
표 2-10. 농업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명, (　)는 %

구분/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매우 만족	**23(3.4)**	4.1	2.5	1.2	1.6	1.4	3.2	4.0	3.4	1.7	1.7	1.1
대체로 만족	**93(13.7)**	16.4	13.3	6.4	8.3	11.2	18.2	25.1	18.0	10.8	8.6	13.7
만족 소계	**116(17.1)**	20.5	15.8	7.6	9.9	12.6	21.4	19.1	21.4	12.5	10.3	14.8
그저 그렇다	**240(35.4)**	39.4	36.4	35.4	35.7	38.8	48.3	43.4	43.1	48.4	48.3	44.2
불만이다	**185(27.3)**	27.9	35.1	28.5	29.4	28.7	21.1	20.7	24.7	26.0	27.3	41.0
매우 불만*	**137(20.2)**	12.2	12.7	28.5	25.0	19.9	9.1	6.8	10.9	13.1	14.2	
합　계	**678(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5년 신설항목.(1994년～2005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그림 2-3. UR출범 이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만족 응답)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7.5%)는 불만족 요인으로 '장래불안'을 가장 많이(46.8%) 꼽아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한 불안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소득보장 미흡'(37.7%),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9.2%), '힘든 육체적 노동'(4.7%), '좋지 않은 일반인의 인식'(1.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11. 농업종사의 불만족 요인

(n=680, 단위 : 명, %)

	소득보장 미흡		힘든 육체적노동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장래불안		일반인의 좋지않은 인식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61	44.5	2	1.5	9	6.6	65	47.4	.	.	.	.	137
60세이상	58	32.4	13	7.3	20	11.2	83	46.4	4	2.2	1	0.6	179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84	37.3	13	5.8	19	8.4	104	46.2	4	1.8	1	0.4	225
2천만원이상	35	38.5	2	2.2	10	11.0	44	48.4	.	.	.	.	91
계	**119**	**37.7**	**15**	**4.7**	**29**	**9.2**	**148**	**46.8**	**4**	**1.3**	**1**	**0.3**	**316**

○ ‘장래불안’을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계층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60세 미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2천만원 이상 계층, 경작규모가 클수록높은 비율로 나타나 젊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보장 미흡’을 요인으로 꼽은 계층 역시 ‘장래불안’을 꼽은 계층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농촌 계속거지 및 이농 의향

○ 앞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77.5%인 524명이 ‘계속 살겠다’라고 대답하였고, 9.8%의 농업인은 ‘농촌을 떠나겠다’고 답했다.

○ 이 밖에 11.4%는 농촌을 떠날는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이다’는 농업인은 1.3%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응답에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12. 농촌에서의 거주 여부

(n=680, 단위 : 명, %)

	계속 살겠다		떠날생각이다		다시 돌아올 생각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40	77.4	29	9.4	6	1.9	35	11.3	310
60세이상	284	77.6	37	10.1	3	0.8	42	11.5	366
계	**524**	**77.5**	**66**	**9.8**	**9**	**1.3**	**77**	**11.4**	**676**

○ 농촌을 ‘떠나겠다’고 생각한 응답자 중 11.1%인 75명은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41.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농사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직업을 변경하여 돈을 벌기위해’(24.7%),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이 어려워서’(12.3%), ‘농촌에는 농사이외에 할만한 일이 없어서’(13.7%), ‘자녀교육을 위해서’(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를 떠나려는 요인으로 꼽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60세 이상,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2천만원 미만 계층의 저소득 계층에서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표 2-13.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n=680, 단위 : 명, %)

	자녀의 교육		돈을 벌기 위해		어려운 농사여건		도시정착자녀		일이 없어서		개방화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3	8.8	14	41.2	1	2.9	.	.	6	17.6	10	29.4	34
60세이상	1	2.6	4	10.3	8	20.5	2	5.1	4	10.3	20	51.3	39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2	4.2	10	20.8	8	16.7	2	4.2	5	10.4	21	43.8	48
2천만원이상	2	8.0	8	32.0	1	4.0	.	.	5	20.0	9	36.0	25
계	**4**	**5.5**	**18**	**24.7**	**9**	**12.3**	**2**	**2.7**	**10**	**13.7**	**30**	**41.1**	**73**

○ 농촌을 떠나겠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떠나는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농하겠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70.4%로 나타나 많은 농업인은 이미 구체적인 이농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4. 농촌을 떠나는 시기

(n=680, 단위 : 명, %)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정하지 않았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	6.9	10	34.5	6	20.7	2	6.9	9	31.0	29
60세이상	3	12.0	9	36.0	8	32.0	1	4.0	4	16.0	25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4	12.1	12	36.4	7	21.2	1	3.0	9	27.3	33
2천만원이상	1	4.8	7	33.3	7	33.3	2	9.5	4	19.0	21
계	**5**	**9.3**	**19**	**35.2**	**14**	**25.9**	**3**	**5.6**	**13**	**24.1**	**54**

○ 그러나 농촌을 떠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아직 이농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농업인이 24.1%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개방속도나 농업의 여건 변화 등이 이들을 계속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이 같은 경영과 관련한 요인들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3.1.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변화

○ 2005년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추곡수매'가 26.9%로 기존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농산물 가격 변동'과 '농산물 수입개방'을 앞섰다. 이는 올해 처음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농산물 수입개방'은 25.8%로 작년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은 25.0%로 지난해에 이어 25%대 이상의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8년간 농업인의 관심사에서 수위를 유지했던 '농산물 가격 변동'은 2년 전부터 관심 정도가 줄면서 2003년에 18.9%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심도가 역전되었으나, 2004년 다시 25.2%, 2005년 25.0%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 이 밖에도 '영농자금·농가부채'는 9.5%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촌지역개발', '농촌인력', '농작물병충해, 기후' 등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표 2-15.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연도별 변화(복수 응답)

단위: 명, %

구분/년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농산물 가격 변동	339(25.0)	25.2	18.9	28.0	33.3	35.4	28.8	27.8	31.6	31.1	27.5	19.3
추곡수매	365(26.9)	17.7	9.6	15.9	25.4	8.5	6.1	6.6	7.3	20.2	16.2	21.5
영농자금·농가부채	129(9.5)	12.3	18.0	16.6	13.2	22.7	18.9	23.1	9.6	7.9	13.0	11.7
농산물 수입개방	350(25.8)	26.9	26.0	21.7	17.4	14.6	10.1	5.7	17.3	16.4	14.9	20.7
농촌지역개발	11(0.8)	2.0	1.7	1.3	1.3	2.2	3.3	3.7	15.0	4.8	6.1	6.4
농촌 인력	72(5.3)	7.4	7.3	6.4	3.0	4.3	6.7	4.0	16.2	9.2	9.6	8.1
농작물병충해, 기후	25(1.8)	2.6	14.3	7.2	4.0	8.6	19.2	20.4	2.5	3.1	7.3	6.0
농기계 등 농자재	25(1.8)	2.5	0.7	0.5	0.3	1.4	2.2	4.3	0.2	1.2	1.1	1.3
영농시설 현대화*	7(0.5)	1.0	0.7	0.2	0.4	0.3	1.9	1.4	0.1	2.0		
농지문제	33(2.4)	2.4	2.9	2.2	1.8	2.0	2.8	3.0	0.2	4.1	5.5	5.6
합 계	1,356(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6년 이후 조사 반영(1994년~2005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 조사 결과)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변화를 연도별로 종합해 정리하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도는 1994년 UR 출범을 정점으로 1998년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8년 이후 매년 4~5%씩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응답률 26.0%로, 다시 2004년에는 26.9%로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부상하다가 2005년에 25.8%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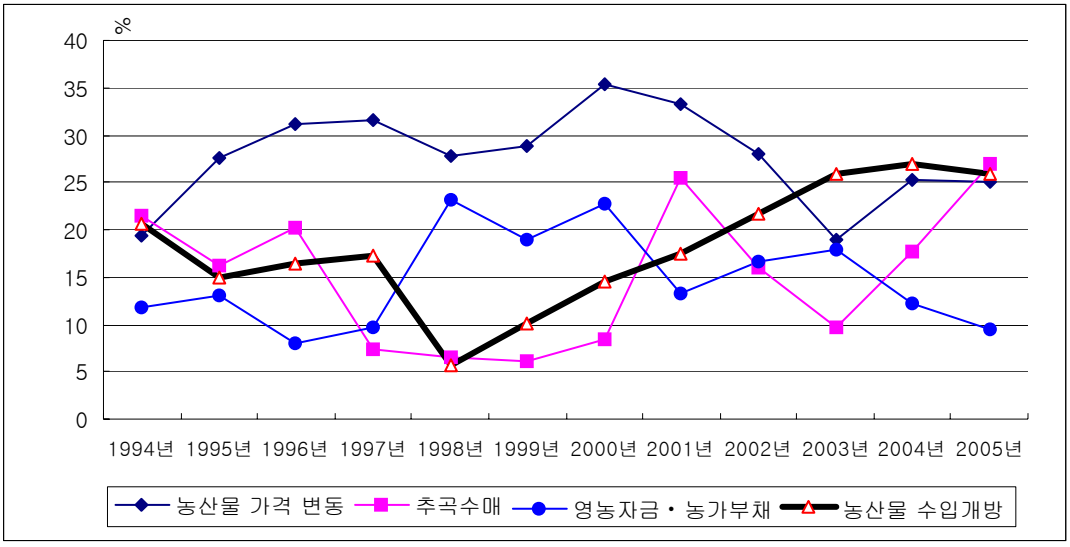
○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한자리수를 유지해 오다가 2001년에는 25.4%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이후 2002년에도 16%대로 낮아지고 2003년에는 9.6%로 3년 만에 다시 한자리 수를 기록하였으나2004년부터 수매제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다시 17.7%로 높아졌고, 수매제 폐지가 발표된 2005년에 26.9%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을 역전하는 결

과가 나타났다.

○ ‘영농자금·농가부채’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은 정부의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던 2001년에 관심도가 약간 줄었다가 2004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두 자리 수를 유지했는데, 다시 2005년에는 9.5%로 낮아져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 수를 기록함으로써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경향을 종합해 보면, 올해 농업인들의 관심 사항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최대 관심 사항으로 지목됐던 농산물 가격 변동이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함께 쌀 관세화 개방 유예 등에 따른 수매제 폐지로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 변화



3.2.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 변화

○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 조사에서는 ‘농촌인력부족’(21.6%)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21.4%),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13.0%), ‘농산물 수입개방’(11.0%) 등의 순으로 꼽았다.

○ ‘농촌인력’ 문제가 농사에 애로 사항으로 꼽혀온 것은 최근 수년간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 사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4년에는 ‘기상·기후조건’, ’95년에는 ‘농촌인력 문제’, ’96년과 ’97년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98년과 ’99년에는 ‘기상·기후 조건’이라고 응답하였다.

○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는 다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2002년에는 ‘수입개방’을 꼽았고, 2003년에는 다시 ‘기상·기후 조건’을 꼽았다가 2004년에는 ‘농촌인력 문제’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이는 2005년에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2].

표 2-16.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복수 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농산물 가격	288	21.4
추곡수매	104	7.7
영농자금, 농가부채	111	8.2
농산물수입개방	148	11.0
농촌지역개발	22	1.6
농촌인력	291	21.6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	175	13.0
농자재	130	9.6
영농시설 현대화	40	3.0
농지문제	36	2.7
기타	3	0.2
합계	**1,348**	**100.0**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조사해 발표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참조. 1993～2005

○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대체로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기후'과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이었으며, 최근 들어 '농촌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 수입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나 영농자금, 농가부채 등의 문제도 농업인들의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3.4.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과 기대

○ 2006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73.2%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전년(63.8%)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한 비율이 9.4%p나 증가하였으며, '올해와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도 25.9%에 달하였다.

표 2-17. 1년 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n=680, 단위 : 명, %)

	올해보다 나아진다		올해와동일		올해보다어려워진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4	0.9	118	26.8	318	72.3	440
2천만원이상	2	0.9	57	24.3	176	74.9	235
주재배작목							
수도작	4	1.3	71	22.3	243	76.4	318
과수	1	1.1	27	29.7	63	69.2	91
노지채소	.	.	13	27.7	34	72.3	47
축산	1	1.3	26	33.8	50	64.9	77
시설원예	.	.	18	23.4	59	76.6	77
특작	.	.	18	37.5	30	62.5	48
기타	.	.	2	11.8	15	88.2	17
계	**6**	**0.9**	**175**	**25.9**	**494**	**73.2**	**675**

○ 반면에,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전망한 농업인은 0.9%에 그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년도에 이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보다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천만원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 소득작목별로는 수도작과 시설원예 농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쌀 관세화 협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쌀산업에 대한 의식

○ 1994년 UR 협상 이후 10년간 유예되었던 쌀시장개방 재협상이 마무리된 2005년에는 쌀 관세화 유예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입 쌀의 시판문제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대책, 쌀산업 구조개편 등에 대한 논란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점을 감안해 농업인들의 쌀 재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1.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인식 및 대응

1.1. 쌀 관세화 유예 국회비준에 대한 평가

○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란 응답이 과반수(47.6%)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부적절한 선택’(24.0%), ‘최악의 선택’(15.9%), ‘아직 평가하기 이른 사안’(11.4%), ‘최선의 선택’(1.0%)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처럼 쌀 재협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인식(48.6%)이 부정적인 인식(39.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의 현실인식이 작용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응답한 계층은 경작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39.9%의 응답계층은 소득과 경작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ha 이상의 규모가 큰 농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였다.

표 3-1.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인식

(n=680, 단위 : 명, %)

	최선의 선택		불가피한 선택		부적절한 선택		최악의 선택		아직 평가하기 이른 사안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5	1.1	209	47.8	102	23.3	69	15.8	52	11.9	437
2천만원이상	2	0.8	112	47.3	60	25.3	38	16.0	25	10.5	237
경작규모											
0.5ha미만	1	2.4	24	58.5	7	17.1	4	9.8	5	12.2	41
0.5~1ha미만	3	1.7	96	53.3	40	22.2	26	14.4	15	8.3	180
1.0~1.5ha미만	2	1.3	75	49.0	35	22.9	19	12.4	22	14.4	153
1.5~2ha미만	1	0.8	49	41.2	32	26.9	24	20.2	13	10.9	119
2~3ha미만	.	.	43	51.8	16	19.3	13	15.7	11	13.3	83
3ha이상	.	.	34	34.7	32	32.7	21	21.4	11	11.2	98
계	**7**	**1.0**	**321**	**47.6**	**162**	**24.0**	**107**	**15.9**	**77**	**11.4**	**674**

1.2. 쌀 관세화 개방 유예의 영향에 대한 인식

○ 쌀 협상 비준안 통과로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가 신인도 유지로 향후 국제 협상에서 불이익 최소화’(40.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입쌀과의 전면 경쟁으로 인한 당장의 피해 최소화’(34.4%), ‘관세화 유예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확보’(21.0%)라고 응답하였다.

○ ‘국가 신인도 유지로 향후 국제 협상에서 불이익 최소화’라고 응답한 계층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경작규모 1.5ha 미만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2. 쌀 관세화 유예로 가장 기대되는 것

(n=680, 단위 : 명, %)

	시간확보		당장의 피해 최소화		국가 신인도 유지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58	19.9	104	35.6	116	39.7	14	4.8	292
60세이상	76	21.9	116	33.4	143	41.2	12	3.5	347
경작규모									
0.5ha미만	5	12.5	14	35.0	16	40.0	5	12.5	40
0.5~1ha미만	39	23.2	58	34.5	66	39.3	5	3.0	168
1.0~1.5ha미만	29	19.6	45	30.4	69	46.6	5	3.4	148
1.5~2ha미만	30	26.3	37	32.5	43	37.7	4	3.5	114
2~3ha미만	14	17.3	33	40.7	31	38.3	3	3.7	81
3ha이상	17	19.3	33	37.5	34	38.6	4	4.5	88
계	**134**	**21.0**	**220**	**34.4**	**259**	**40.5**	**26**	**4.1**	**639**

표 3-3. 쌀 관세화 유예로 가장 우려되는 것

(n=680, 단위 : 명, %)

	수입 쌀 시판		농업인의 농정불신 심화		농촌의 황폐화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59	51.5	57	18.4	88	28.5	5	1.6	309
60세이상	197	54.1	55	15.1	111	30.5	1	0.3	364
경작규모									
0.5ha미만	20	51.3	10	25.6	9	23.1	.	.	39
0.5~1ha미만	97	54.2	30	16.8	51	28.5	1	0.6	179
1.0~1.5ha미만	76	49.7	21	13.7	55	35.9	1	0.7	153
1.5~2ha미만	67	55.8	19	15.8	33	27.5	1	0.8	120
2~3ha미만	46	55.4	16	19.3	20	24.1	1	1.2	83
3ha이상	50	50.5	16	16.2	31	31.3	2	2.0	99
계	356	52.9	112	16.6	199	29.6	6	0.9	673

○ 쌀 협상 비준안 통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반수가 넘는 농업인(52.9%)이 ‘수입쌀 시판으로 국산 쌀값 하락과 벼농사 기반 잠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쌀농사 포기 등으로 농촌 황폐화’(29.6%), ‘농업인의 농정 불신 심화로 향후 정부정책 시행 차질 불가피’(16.6%)로 나타났다.

○ ‘수입쌀 시판으로 국산 쌀값 하락과 벼농사 기반 잠식’을 우려하는 응답비율은 연령대가 높고 경작규모가 작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3. 쌀 관세화 개방 유예 이후 가장 시급한 대책

○ 쌀 관세화 유예 이후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과반수 농업인(63.0%)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방안 마련’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시장성 있는 대체작물 개발, 육성안 마련’(14.4%), ‘쌀자급률 목표 설정 등 중장기 대책 제시’(12.8%), ‘국산쌀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 운동’(9.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4. 쌀 관세화 유예 이후 가장 시급한 대책

(n=680, 단위 : 명, %)

	농가소득 보전		중장기 대책		대체작물 개발		국산 쌀 홍보 및 소비촉진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90	61.5	52	16.8	47	15.2	17	5.5	3	1.0	309
60세이상	234	64.3	34	9.3	50	13.7	44	12.1	2	0.5	364
주재배작목											
수도작	220	69.8	33	10.5	32	10.2	30	9.5	.	.	315
과수	56	59.6	10	10.6	16	17.0	11	11.7	1	1.1	94
노지채소	18	39.1	9	19.6	13	28.3	6	13.0	.	.	46
축산	45	59.2	14	18.4	7	9.2	8	10.5	2	2.6	76
시설원예	46	59.7	13	16.9	15	19.5	2	2.6	1	1.3	77
특작	28	58.3	7	14.6	9	18.8	4	8.3	.	.	48
기타	11	64.7	.	.	5	29.4	.	.	1	5.9	17
계	**424**	**63.0**	**86**	**12.8**	**97**	**14.4**	**61**	**9.1**	**5**	**0.7**	**673**

○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방안 마련’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60세 이상, 주 소득원이 수도작농가와 시설원예 농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농업인들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부의 대책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계획’(32.6%), ‘수확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과 브랜드 관리’(16.5%), ‘가격 경쟁력 제고’(5.5%) 등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54.0%로 10명 중 5명 정도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에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25.0%), ‘쌀농사 포기 후 대체작물 개발’(14.8%), ‘전직 등 고려’(4.2%) 등 역시 절반에 가까운 농가는 (44.0%) 쌀 관세화 개방 유예에도 불구하고 벼농사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자구책

(n=680, 단위 : 명, %)

	철저한 품질과 브랜드 관리		가격경쟁력제고		대체작물 개발		전직 등 고려		적절히 대처		준비계획 없다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60	19.5	20	6.5	51	16.6	19	6.2	102	33.2	48	15.6	7	2.3	307
60세이상	51	14.0	17	4.7	48	13.2	9	2.5	117	32.1	120	33.0	2	0.5	364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53	12.2	21	4.8	62	14.2	19	4.4	144	33.0	134	30.7	3	0.7	436
2천만원이상	58	24.7	16	6.8	37	15.7	9	3.8	75	31.9	34	14.5	6	2.6	235
계	**111**	**16.5**	**37**	**5.5**	**99**	**14.8**	**28**	**4.2**	**219**	**32.6**	**168**	**25.0**	**9**	**1.3**	**671**

1.4.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벼 재배 의향면적 변화

○ 농업인들은 쌀시장 관세화 유예와 수입 쌀 시판 등 변화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경작면적 조정 의사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9%는 ‘현 수

준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응답했고, '정부의 소득보장 대책을 보고 결정하겠다'(22.6%), '축소할 계획이다'(18.0%) 순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3.0%에 머물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 '축소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천만원 미만의 영세농과 2ha 미만인 경작규모를 소유한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할 계획'이라는 농가는 2천만원 이상 농가와 3ha 이상의 경작규모를 소유한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한편, 경작면적 조정 여부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조사 결과에서도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 조정 의사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쌀시장 관세화 개방 유예와 수입 쌀 시판 등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보장 대책 내용에 따라 농가 단위의 경작면적이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 2006년 벼 재배면적 의향

(n=680, 단위 : 명, %)

	축소할 계획		현 수준 유지		확대할 계획		정부의 소득보장 대책을 보고 결정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83	19.1	218	50.2	6	1.4	112	25.8	15	3.5	434
2천만원이상	37	16.0	127	55.0	14	6.1	38	16.5	15	6.5	231
경작규모											
0.5ha미만	5	13.2	17	44.7	2	5.3	9	23.7	5	13.2	38
0.5~1ha미만	38	21.3	89	50.0	1	0.6	43	24.2	7	3.9	178
1.0~1.5ha미만	32	20.9	79	51.6	2	1.3	34	22.2	6	3.9	153
1.5~2ha미만	33	28.2	49	41.9	4	3.4	24	20.5	7	6.0	117
2~3ha미만	6	7.3	49	59.8	4	4.9	19	23.2	4	4.9	82
3ha이상	6	6.2	62	63.9	7	7.2	21	21.6	1	1.0	97
계	**120**	**18.0**	**345**	**51.9**	**20**	**3.0**	**150**	**22.6**	**30**	**4.5**	**665**

2. 쌀산업 대책에 대한 견해

2.1.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대한 반응

○ 농업인들에게 2002년 10월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이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가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농가가 59.7%('매우 도움이 됨' 3.7%, '어느정도 도움이 됨' 56.0%)로 나타났다.

○ 반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은 38.3%('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33.5%,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4.8%)로 나타나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

○ 이를 연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은 2천만원 미만의 영세농 계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2천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경작규모 계층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7.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반응

(n=680, 단위 : 명, %)

	매우도움이됨		어느정도 도움이 됨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18	4.1	257	58.9	133	30.5	18	4.1	10	2.3	436
2천만원이상	7	3.0	117	50.4	91	39.2	14	6.0	3	1.3	232
경작규모											
0.5ha미만	3	7.7	22	56.4	11	28.2	2	5.1	1	2.6	39
0.5~1ha미만	8	4.5	102	57.0	60	33.5	6	3.4	3	1.7	179
1.0~1.5ha미만	7	4.6	80	52.6	50	32.9	12	7.9	3	2.0	152
1.5~2ha미만	5	4.3	63	53.8	41	35.0	3	2.6	5	4.3	117
2~3ha미만	2	2.4	48	58.5	28	34.1	3	3.7	1	1.2	82
3ha이상	.	.	59	59.6	34	34.3	6	6.1	.	.	99
계	**25**	**3.7**	**374**	**56.0**	**224**	**33.5**	**32**	**4.8**	**13**	**1.9**	**668**

2.2. 공공비축 매입가격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

○ 2005년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60.2%), '지역별 가격 적용'(33.7%) 순으로 응답했다.

○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을 선호한 계층은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의 영세농에서, 경작규모가 1.5ha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영세농일수록 도별 매입가격의 차가 발생하는 지역별 가격 적용방식보다는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바람직한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 방식

(n=680, 단위 : 명, %)

	전국 동일 가격 적용		지역별 가격 적용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287	65.5	121	27.6	30	6.8	438
2천만원이상	117	50.2	105	45.1	11	4.7	233
경작규모							
0.5ha미만	32	80.0	6	15.0	2	5.0	40
0.5~1ha미만	114	63.3	52	28.9	14	7.8	180
1.0~1.5ha미만	95	62.5	47	30.9	10	6.6	152
1.5~2ha미만	66	55.9	46	39.0	6	5.1	118
2~3ha미만	54	65.1	24	28.9	5	6.0	83
3ha이상	43	43.9	51	52.0	4	4.1	98
계	**404**	**60.2**	**226**	**33.7**	**41**	**6.1**	**671**

○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반수의 농업인(60.9%)이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이라 응답하였으며, '지역별 가격 적용'(34.0%) 순으로 응답해 바람직한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3-9. 선호하는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 방식

(n=680, 단위 : 명, %)

	전국 동일 가격 적용		지역별 가격 적용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연평균소득							
2천만원미만	288	66.1	122	28.0	26	6.0	436
2천만원이상	120	51.3	106	45.3	8	3.4	234
경작규모							
0.5ha미만	27	71.1	9	23.7	2	5.3	38
0.5~1ha미만	119	66.5	50	27.9	10	5.6	179
1.0~1.5ha미만	98	64.1	46	30.1	9	5.9	153
1.5~2ha미만	65	54.6	47	39.5	7	5.9	119
2~3ha미만	56	67.5	23	27.7	4	4.8	83
3ha이상	43	43.9	53	54.1	2	2.0	98
계	**408**	**60.9**	**228**	**34.0**	**34**	**5.1**	**670**

제 4 장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1. 주요 농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

1.1. 농업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 정부가 시행한 지난 1년간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농업인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매우 또는 대체로 합산)’는 응답은 전체의 5.4%에 그쳤으며, ‘불만(매우 또는 대체로 합산)’이라는 응답은 64.5%에 달해 현재의 농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농업인은 29.1%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인식은 연령대로 차이를 보여 긍정적인(만족) 평가에서 60세 미만은 3.3%, 60세 이상은 9.1%를 기록하였고, 부정적인(불만) 인식에서도 60세 미만은 70.2%를, 60세 이상은 59.7%로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뚜렷하였다.

○ 작목별로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특작 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과수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만족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n=680, 단위 : 명, %)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3	1.0	7	2.3	82	26.5	118	38.2	99	32.0	309
60세이상	4	1.1	29	8.0	113	31.2	145	40.1	71	19.6	362
주재배작목											
수도작	4	1.3	20	6.3	87	27.5	121	38.3	84	26.6	316
과수	.	.	7	7.6	30	32.6	39	42.4	16	17.4	92
노지채소	1	2.2	1	2.2	15	33.3	19	42.2	9	20.0	45
축산	1	1.3	4	5.2	16	20.8	38	49.4	18	23.4	77
시설원예	1	1.3	1	1.3	22	28.9	27	35.5	25	32.9	76
특작	.	.	1	2.1	14	29.2	17	35.4	16	33.3	48
기타	.	.	2	11.8	11	64.7	2	11.8	2	11.8	17
계	**7**	**1.0**	**36**	**5.4**	**195**	**29.1**	**263**	**39.2**	**170**	**25.3**	**671**

표 4-2. 현정부의 출범 초기와 현재의 농업에 대한 인식정도

(n=680, 단위 : 명, %)

	매우높아졌다		높아진편		그저그렇다		낮아진편		매우낮아졌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3	1.0	19	6.1	127	41.0	99	31.9	62	20.0	310
60세이상	3	0.8	53	14.6	152	41.9	112	30.9	43	11.8	363
주재배작목											
수도작	3	0.9	33	10.4	125	39.6	102	32.3	53	16.8	316
과수	1	1.1	15	16.3	40	43.5	25	27.2	11	12.0	92
노지채소	1	2.2	2	4.3	19	41.3	13	28.3	11	23.9	46
축산	1	1.3	7	9.1	27	35.1	34	44.2	8	10.4	77
시설원예	.	.	7	9.1	32	41.6	21	27.3	17	22.1	77
특작	.	.	6	12.5	26	54.2	11	22.9	5	10.4	48
기타	.	.	2	11.8	10	58.8	5	29.4	.	.	17
계	**6**	**0.9**	**72**	**10.7**	**279**	**41.5**	**211**	**31.4**	**105**	**15.6**	**673**

○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출범 초기에 비해 '높은 편'(매우 높은 편 합산)이라는 응답은 11.6%인 반면, '낮은 편'(매우 낮은 편 합산)이라는 응답은 47.0%로 과반수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현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출범초기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출범 초기에 비해 낮아졌다는 계층은 60세 미만의 젊은 계층에서, 작목별로는 축산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정에 대한 견해

○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정책(직접 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대 등)'을 최우선으로(67.9%)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촌정책'(17.4%), '농업정책'(14.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향후 소득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을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로는 60세 이상인 계층에서, 작목별로는 수도작농가에서 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3.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n=680, 단위 : 명, %)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57	18.4	207	67.0	45	14.6	309
60세이상	42	11.6	249	68.6	72	19.8	363
주재배작목							
수도작	31	9.8	234	73.8	52	16.4	317
과수	17	18.7	58	63.7	16	17.6	91
노지채소	13	28.3	25	54.3	8	17.4	46
축산	15	19.5	48	62.3	14	18.2	77
시설원예	13	16.9	50	64.9	14	18.2	77
특작	9	18.8	28	58.3	11	22.9	48
기타	1	6.3	13	81.3	2	12.5	16
계	99	14.7	456	67.9	117	17.4	672

1.3.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에 대한 견해

○ 2004년 2월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119조원 투융자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다(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합산)'고 평가한 응답률은 20.0% 나타났으며, 38.5%는 '잘못 추진되고 있다(매우 잘못 추진되고 있다 합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6%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119조원 투융자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60세 미만에서, 작목별로는 특작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119조원 투융자 사업 추진에 대한 반응

(n=680, 단위 : 명, %)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다		잘모르겠다		잘못 추진되는 것 같다		매우 잘못 추진되고있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3	1.0	51	16.6	113	36.7	98	31.8	43	14.0	308
60세이상	3	0.8	77	21.2	166	45.7	81	22.3	36	9.9	363
주재배작목											
수도작	2	0.6	58	18.4	128	40.6	87	27.6	40	12.7	315
과수	.	.	25	27.2	41	44.6	16	17.4	10	10.9	92
노지채소	.	.	7	15.2	22	47.8	12	26.1	5	10.9	46
축산	2	2.6	16	20.8	31	40.3	21	27.3	7	9.1	77
시설원예	.	.	14	18.4	29	38.2	22	28.9	11	14.5	76
특작	.	.	6	12.5	18	37.5	19	39.6	5	10.4	48
기타	2	11.8	2	11.8	10	58.8	2	11.8	1	5.9	17
계	**6**	**0.9**	**128**	**19.1**	**279**	**41.6**	**179**	**26.7**	**79**	**11.8**	**671**

1.4.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정도

○ 농업인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 4점 만점으로 가중 평균치를 구한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2.6점)하였다.

○ 다음으로는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친환경농업 육성’(각각 2.5점), ‘농촌지역 개발’,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각각 2.4점)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농업기계화 · 시설현대화 지원’, ‘농산물 안전성 · 고품질화 지원’(각각 2.3점)등은 평균점수를 유지하였다.

○ 이 밖에 ‘농업인 연금지원 등 부담경감’, ‘교육여건 및 의료 서비스 확충’(각각 2.2점), ‘농외소득 증대’, ‘경영안정 지원’(각각 2.1점), ‘소비지 유통혁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각각 2.0점) 등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4-5. 농업정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인식정도

(n=680, 단위 : %)

구 분	매우잘 하고있음	잘하는편	**매우잘함+ 잘하는편**	잘못하고 있는편	매우 잘못 하고 있음	**평균 (점)**
농업생산기반 정비	4.8	59.0	**63.7**	30.4	5.8	**2.6**
친환경농업 육성	6.5	47.9	**54.4**	37.7	7.9	**2.5**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4.3	49.9	**54.2**	37.3	8.5	**2.5**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	4.3	44.6	**48.9**	41.9	9.2	**2.4**
마을 정비 등 농촌지역 개발	3.0	47.8	**50.7**	38.3	10.9	**2.4**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	3.5	39.5	**43.0**	45.9	11.1	**2.4**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	4.1	38.1	**42.2**	45.0	12.9	**2.3**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	3.3	35.3	**38.6**	49.1	12.4	**2.3**
전문농업인력 육성	4.9	27.8	**32.7**	53.9	13.4	**2.2**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	2.7	34.8	**37.5**	44.2	18.3	**2.2**
교육여건 및 의료 서비스 확충	2.6	33.7	**36.3**	46.6	17.1	**2.2**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1.4	22.1	**23.5**	59.3	17.3	**2.1**
재해보험 등 경영 안정 지원	1.9	22.3	**24.2**	56.7	19.1	**2.1**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혁신	0.7	19.7	**20.4**	61.7	17.9	**2.0**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1.5	18.9	**20.4**	60.4	19.3	**2.0**

1.5. 향후 투융자가 확대되길 바라는 분야

○ 정부가 향후 투융자를 확대해 주기 바라는 분야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최우선으로(12.3%)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9.9%),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9.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이 밖에,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8.1%),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7.3%), '농업생산기반 정비'(6.9%) 등으로 나타났다.

표 4-6. 향후 투융자가 확대되길 바라는 사업

(n=680,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	234	12.3
농업인연금 지원 등 가계부담경감	188	9.9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지원	173	9.1
농산물산지유통 혁신	155	8.1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	140	7.3
농업생산기반 정비	132	6.9
경영안정지원	129	6.8
친환경농업 육성	130	6.8
전문농업인력 육성	111	5.8
교육여건 및 의료 서비스 확충	100	5.2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92	4.8
농촌지역개발	88	4.6
농외소득 증대	82	4.3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	76	4.0
소비지 유통혁신	74	3.9
합계	1,904	100.0

1.6. 쌀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가 2005년 역점 추진한 쌀산업정책 중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대책'(3.2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로 '품질경쟁력 제고'(2.8점), '수급균형 유지'(2.4점), '양정제도 개편'(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쌀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순

문항	가중평균	순위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대책	3.2	1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구축 등 품질 경쟁력 제고	2.8	2
쌀 적정생산 유도 및 소비 촉진 등 수급 균형 유지	2.4	3
추곡약정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2.0	4

1.7.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평가

○ 정부가 2005년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내용 중 농업인들은 '복지기반 확충'(3.3점)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역개발 촉진'(2.6점), '교육여건 개선'(2.5점), '복합산업 활성화'(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는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관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촌복지 확충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8.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평가

문항	가중평균	순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확대 등 복지기반 확충	3.3	1
농촌마을 종합개발, 마을리더 육성 등 지역개발 촉진	2.6	2
학자금 지원 확대, 우수고교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2.5	3
농촌관광 확대, 향토산업 육성 등 복합산업 활성화	2.0	4

1.8.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한 견해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0월 25일 농어촌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 1,976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과반수인 60.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5%는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 계층별로는 연령대별 60세 이상인 계층에서, 고졸 이상인 학력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인 반면, 부정하는 응답률은 60세 미만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9.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한 인식정도

(n=680, 단위 : 명, %)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76	57.7	114	37.4	15	4.9	305
60세이상	220	62.3	87	24.6	46	13.0	353
학력							
무학	.	.	.	.	1	100.0	1
한학	2	28.6	4	57.1	1	14.3	7
국졸	57	60.6	21	22.3	16	17.0	94
중졸	109	59.2	55	29.9	20	10.9	184
고졸	187	61.7	97	32.0	19	6.3	303
대졸이상	41	59.4	24	34.8	4	5.8	69
계	**396**	**60.2**	**201**	**30.5**	**61**	**9.3**	**658**

○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들은 찬성 이유로, '좋은 교육 환경으로 질 높은 수업'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인 60.7%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의욕 고조'(23.3%), '올바른 사회성과 인격형성 도움'(7.0%), '폐교를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가능'(3.4%)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0.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n=680, 단위 : 명, %)

	좋은 교육 환경으로 질 높은 수업		올바른 사회성과 인격형성 도움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의욕 고조		폐교를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가능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07	61.5	8	4.6	50	28.7	4	2.3	5	2.9	174
60세이상	128	60.1	19	8.9	40	18.8	9	4.2	17	8.0	213
학력											
한학	1	50.0	.	.	.	.	1	50.0	.	.	2
국졸	33	60.0	4	7.3	13	23.6	1	1.8	4	7.3	55
중졸	64	60.4	7	6.6	23	21.7	5	4.7	7	6.6	106
고졸	111	60.7	11	6.0	47	25.7	5	2.7	9	4.9	183
대졸이상	26	63.4	5	12.2	7	17.1	1	2.4	2	4.9	41
계	**235**	**60.7**	**27**	**7.0**	**90**	**23.3**	**13**	**3.4**	**22**	**5.7**	**387**

표 4-11.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n=680, 단위 : 명, %)

	농어촌살리기 정책과 배치		어린학생 교육여건 악화		학생 수만으로의 통폐합 경정		정서적피해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44	37.0	13	10.9	36	30.3	25	21.0	1	0.8	119
60세이상	34	40.0	8	9.4	14	16.5	19	22.4	10	11.8	85
학력											
한학	.	.	.	.	1	33.3	1	33.3	1	33.3	3
국졸	8	38.1	4	19.0	2	9.5	7	33.3	.	.	21
중졸	23	42.6	3	5.6	9	16.7	15	27.8	4	7.4	54
고졸	39	38.2	11	10.8	26	25.5	20	19.6	6	5.9	102
대졸이상	8	33.3	3	12.5	12	50.0	1	4.2	.	.	24
계	**78**	**38.2**	**21**	**10.3**	**50**	**24.5**	**44**	**21.6**	**11**	**5.4**	**204**

○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농업인들은 그 이유를 '농촌인구 감소 등에 따른 농어촌살리기 정책과 배치'(38.2%), '교육여건 등 무시하고 학생 수만으로 통폐합 결정'(24.5%), '시골의 유일한 문화적 공간인 학교 폐쇄로 정서적 피해'(21.6%), '원거리 통학 등 어린학생 교육여건 악화'(10.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농촌인구 감소 등에 따른 농어촌살리기 정책과 배치'이라는 우려감은 60세 이상인 계층과 중졸인 학력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2.1.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정도

○ 친환경 농업을 농사의 일부라도 실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7.2%, '아니다'는 응답이 32.8%로 조사돼 실천하고 있다는 농가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농가를 계층 간에 비교해 보면, 학력계층별로 고학력일수록 뚜렷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작목별로는 과수농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다소 높았다.

○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를 살펴본 결과, 과반수이상의 농업인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68.2%)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전략'(15.6%), '환경오염 감소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라고 응답한 계층을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작목별로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2.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n=680, 단위 : 명, %)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05	68.1	96	31.9	301
60세이상	224	66.5	113	33.5	337
학력					
무학	1	100.0	.	.	1
한학	4	80.0	1	20.0	5
국졸	57	62.0	35	38.0	92
중졸	111	62.7	66	37.3	177
고졸	207	70.2	88	29.8	295
대졸이상	49	72.1	19	27.9	68
주재배작목					
수도작	187	61.7	116	38.3	303
과수	69	80.2	17	19.8	86
노지채소	24	55.8	19	44.2	43
축산	51	72.9	19	27.1	70
시설원예	57	76.0	18	24.0	75
특작	28	60.9	18	39.1	46
기타	13	86.7	2	13.3	15
계	**429**	**67.2**	**209**	**32.8**	**638**

표 4-13.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n=680, 단위 : 명, %)

	안전한 먹거리 생산, 소비자 신뢰확보		환경오염 감소, 지속가능 농업 실현		농산물 시장개방, 차별화전략		종교적 차원의 신념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135	66.5	26	12.8	39	19.2	1	0.5	2	1.0	203
60세이상	157	70.7	32	14.4	28	12.6	4	1.8	1	0.5	222
학력											
무학	1	100.0	.	.	.	.	.	.	.	.	1
한학	1	25.0	1	25.0	2	50.0	.	.	.	.	4
국졸	45	80.4	3	5.4	5	8.9	2	3.6	1	1.8	56
중졸	70	64.2	17	15.6	19	17.4	2	1.8	1	0.9	109
고졸	140	68.0	29	14.1	35	17.0	1	0.5	1	0.5	206
대졸이상	35	71.4	8	16.3	6	12.2	.	.	.	.	49
주재배 작목											
수도작	119	64.0	31	16.7	32	17.2	3	1.6	1	0.5	186
과수	44	65.7	10	14.9	11	16.4	.	.	2	3.0	67
노지채소	17	73.9	2	8.7	3	13.0	1	4.3	.	.	23
축산	36	70.6	5	9.8	10	19.6	.	.	.	.	51
시설원예	47	82.5	5	8.8	5	8.8	.	.	.	.	57
특작	20	71.4	1	3.6	6	21.4	1	3.6	.	.	28
기타	9	69.2	4	30.8	.	.	.	.	.	.	13
계	**292**	**68.7**	**58**	**13.6**	**67**	**15.8**	**5**	**1.2**	**3**	**0.7**	**425**

2.2. 친환경농업 기술에 대한 인지정도

○ 친환경농산물 재배 기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아주, 대체로, 조금 포함)'는 응답은 99.7%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르고 있다'는 2.5%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친환경 재배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알고있다'는 정도에 따라, '대체로 알고 있다'는 54.2%, '조금알고 있다'(34.1%), '아주 잘 알고 있다'(11.4%) 순으로 나타났다.

○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아주 잘 알고 있다'와 '대체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계층은 고학력일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조금 알고 있다'는 저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친환경농산물 재배 기준에 대한 인식정도

(n=680, 단위 : 명, %)

	아주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8	13.7	105	51.2	72	35.1		.	205
60세이상	21	9.4	127	57.0	74	33.2	1	0.4	223
학력									
무학	.	.	1	100.0	.	.		.	1
한학	.	.	2	50.0	2	50.0	.	.	4
국졸	6	10.7	24	42.9	26	46.4	.	.	56
중졸	9	8.1	62	55.9	39	35.1	1	0.9	111
고졸	27	13.0	116	56.0	64	30.9	.	.	207
대졸이상	7	14.3	27	55.1	15	30.6	.	.	49
계	**49**	**11.4**	**232**	**54.2**	**146**	**34.1**	**1**	**0.2**	**428**

2.3.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 정도

○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의 인식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과반수이상인 64.9%가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20~29% 정도 높다'(14.3%), '30~39% 이상 높다'(4.2%) 순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낮다'는 응답도 15.8%로 나타났다.

표 4-15.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 정도

(n=680, 단위 : 명, %)

	오히려 낮음		10-19%정도 높음		20-29%정도 높음		30-39%이상 높음		40% 이상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8	14.2	134	68.0	25	12.7	10	5.1	.	.	197
60세이상	36	17.3	129	62.0	33	15.9	7	3.4	3	1.4	208
주재배 작목											
수도작	29	16.5	113	64.2	26	14.8	6	3.4	2	1.1	176
과수	13	20.0	43	66.2	3	4.6	6	9.2	.	.	65
노지채소	1	4.3	16	69.6	5	21.7	1	4.3	.	.	23
축산	4	8.0	34	68.0	11	22.0	1	2.0	.	.	50
시설원예	11	22.0	30	60.0	7	14.0	1	2.0	1	2.0	50
특작	3	10.7	21	75.0	3	10.7	1	3.6	.	.	28
기타	3	23.1	6	46.2	3	23.1	1	7.7	.	.	13
계	**64**	**15.8**	**263**	**64.9**	**58**	**14.3**	**17**	**4.2**	**3**	**0.7**	**405**

2.4. 친환경농업 실천 후 소득변화 정도

○ 친환경농업 실천 이후 일반농업에 비한 소득변화는 '비슷하다'(45.7%), '감소한다'(28.6%), '증가한다'(25.7%) 순으로 나타났다. 감소한다는 농가는 평균 18.5% 감소, 증가한다는 농가는 평균 14.6%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 이처럼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에 대한 질문에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소득변화는 '비슷하다' 또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른다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려면 가격차별화와 함께 유통망 확충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16. 친환경농업 실천 후 소득변화 정도

(n=680, 단위 : 명, %)

	증가한다		감소한다		비슷하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41	20.4	53	26.4	107	53.2	201
60세이상	64	30.8	64	30.8	80	38.5	208
주재배 작목							
수도작	46	25.3	58	31.9	78	42.9	182
과수	21	33.3	14	22.2	28	44.4	63
노지채소	7	31.8	6	27.3	9	40.9	22
축산	11	21.6	13	25.5	27	52.9	51
시설원예	12	21.8	14	25.5	29	52.7	55
특작	6	26.1	7	30.4	10	43.5	23
기타	2	15.4	5	38.5	6	46.2	13
계	**105**	**25.7**	**117**	**28.6**	**187**	**45.7**	**409**

2.5. 친환경농업 실천 시 애로사항

○ 친환경농업 실천시 애로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동력 과다소요'를 제일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재배기술 미흡', '판매가격 불안정'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노동력 과다소요'라는 애로 사항은 '[표 2-16] 농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 중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농촌인력부족'이라 꼽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

표 4-17. 친환경농업 실천시 애로사항

구 분	순위
재배기술 미흡	2
노동력 과다소요	1
퇴비확보의 어려움	5
판매가격 불안정	3
판로개척 어려움	4
운영자금 부족	8
재배시설 낙후	7
상품성 유지 곤란	6
기타	9

2.6. 친환경농산물 영농규모 확대 의향

○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영농규모 확대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규모 유지'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확대예정'(26.5%), '축소 예정'(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8. 친환경농산물 영농규모 확대의향

(n=680, 단위 : 명, %)

	확대 예정		축소 예정		현재규모 유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62	30.5	24	11.8	117	57.6	203
60세이상	49	22.7	25	11.6	142	65.7	216
주재배 작목							
수도작	47	25.7	24	13.1	112	61.2	183
과수	22	32.4	2	2.9	44	64.7	68
노지채소	3	13.0	1	4.3	19	82.6	23
축산	15	30.0	6	12.0	29	58.0	50
시설원예	9	16.4	8	14.5	38	69.1	55
특작	12	44.4	4	14.8	11	40.7	27
기타	3	23.1	4	30.8	6	46.2	13
계	**111**	**26.5**	**49**	**11.7**	**259**	**61.8**	**419**

○ 이 같은 결과를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현재규모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목별로는 특작농가가 확대하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41.9%)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지채소 농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7.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인지도와 참여 의향

○ 2006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는 농업인이 53.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잘 모른다'(36.9%),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인지도

(n=680, 단위 : 명, %)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		잘 모른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33	11.2	167	56.8	94	32.0	294
60세이상	24	7.5	165	51.2	133	41.3	322
학력							
무학	.	.	1	100.0	.	.	1
한학	2	33.3	1	16.7	3	50.0	6
국졸	4	4.5	45	51.1	39	44.3	88
중졸	13	7.6	90	52.3	69	40.1	172
고졸	31	11.1	155	55.4	94	33.6	280
대졸이상	7	10.1	40	58.0	22	31.9	69
주재배작목							
수도작	22	7.6	148	51.4	118	41.0	288
과수	13	14.9	42	48.3	32	36.8	87
노지채소	2	4.9	22	53.7	17	41.5	41
축산	6	8.5	47	66.2	18	25.4	71
시설원예	8	11.4	46	65.7	16	22.9	70
특작	5	11.6	21	48.8	17	39.5	43
기타	1	6.3	6	37.5	9	56.3	16
계	**57**	**9.3**	**332**	**53.9**	**227**	**36.9**	**616**

○ 이처럼 내용까지 ‘잘 알고있다’는 농업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고,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저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참여의향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인 75.9%은 ‘지원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즉시 참여하겠다’(18.5%), ‘참여하지 않겠다’(5.6%)를 나타냈다.

○ ‘지원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농가 계층은 60세 미만인 젊은 계층에서, 학력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작목별로는 수도작 농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이 같은 결과는 지원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여 농가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한다.

표 4-20.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참여의향

(n=680, 단위 : 명, %)

	즉시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지원 내용 보고 결정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56	19.0	8	2.7	230	78.2	294
60세이상	59	17.9	27	8.2	243	73.9	329
학력							
무학	.	.	.	.	1	100.0	1
한학	1	16.7	.	.	5	83.3	6
국졸	8	8.9	4	4.4	78	86.7	90
중졸	30	17.0	15	8.5	131	74.4	176
고졸	57	20.3	13	4.6	211	75.1	281
대졸이상	19	27.5	3	4.3	47	68.1	69
주재배작목							
수도작	45	15.3	21	7.1	229	77.6	295
과수	26	30.2	6	7.0	54	62.8	86
노지채소	9	22.0	2	4.9	30	73.2	41
축산	16	22.5	2	2.8	53	74.6	71
시설원예	14	19.7	3	4.2	54	76.1	71
특작	5	11.6	1	2.3	37	86.0	43
기타	.	.	.	.	16	100.0	16
계	**115**	**18.5**	**35**	**5.6**	**473**	**75.9**	**623**

2.8.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지도와 참여의향

○ 2006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2.3%가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른다'는 36.9%,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10.8%로 나타났다.

○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는 의견을 가진 농가 계층은 60세 이상보다 60세 미만에서,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작목별로는 축산농가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2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지도

(n=680, 단위 : 명, %)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		잘 모른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42	14.4	171	58.6	79	27.1	292
60세이상	24	7.5	148	46.5	146	45.9	318
학력							
무학	.	.	1	100.0	.	.	1
한학	1	16.7	2	33.3	3	50.0	6
국졸	4	4.7	37	43.0	45	52.3	86
중졸	12	7.0	91	52.9	69	40.1	172
고졸	40	14.3	149	53.4	90	32.3	279
대졸이상	9	13.6	39	59.1	18	27.3	66
주재배작목							
수도작	26	9.1	138	48.4	121	42.5	285
과수	12	14.1	44	51.8	29	34.1	85
노지채소	3	7.3	21	51.2	17	41.5	41
축산	11	15.7	46	65.7	13	18.6	70
시설원예	9	13.0	42	60.9	18	26.1	69
특작	4	9.1	22	50.0	18	40.9	44
기타	1	6.3	6	37.5	9	56.3	16
계	**66**	**10.8**	**319**	**52.3**	**225**	**36.9**	**610**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6.8%)이 '지원 내용 보고 결정'한다고 응답하였고, '즉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16.8%, '참여하지 않겠다'는 6.4%에 그쳐 대다수가 지원 내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참여의향

(n=680, 단위 : 명, %)

	즉시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지원 내용 보고 결정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55	18.9	12	4.1	224	77.0	291
60세이상	48	15.0	27	8.4	246	76.6	321
학력							
무학	.	.	.	.	1	100.0	1
한학	.	.	1	16.7	5	83.3	6
국졸	4	4.8	5	6.0	74	89.2	83
중졸	30	17.1	12	6.9	133	76.0	175
고졸	55	19.6	18	6.4	208	74.0	281
대졸이상	14	21.2	3	4.5	49	74.2	66
주재배작목							
수도작	43	14.9	21	7.3	224	77.8	288
과수	19	22.6	8	9.5	57	67.9	84
노지채소	6	14.6	3	7.3	32	78.0	41
축산	17	24.3	2	2.9	51	72.9	70
시설원예	14	20.3	3	4.3	52	75.4	69
특작	4	9.1	1	2.3	39	88.6	44
기타	.	.	1	6.3	15	93.8	16
계	**103**	**16.8**	**39**	**6.4**	**470**	**76.8**	**612**

2.9. 식품 안전관리부서의 개편 및 명칭

○ ‘김치 파동’과 같은 식품안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식품 안전관리를 농림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응답자 10명 중 6명(66.6%)이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건복지부로 일원화’(19.6%), ‘잘 모르겠다’(7.2%), ‘제3의 부처나 기구로 일원화’(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미만인 계층에서,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작목별로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표 4-23. 식품안전관리 부처의 개편에 대한 의견

(n=680, 단위 : 명, %)

	농림부로 일원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제3의 부처나 기구로 일원화		잘 모르겠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07	67.9	60	19.7	22	7.2	16	5.2	305
60세이상	228	65.5	68	19.5	21	6.0	31	8.9	348
학력									
무학	1	100.0	.	.	.	.	.	.	1
한학	4	57.1	3	42.9	.	.	.	.	7
국졸	61	64.2	15	15.8	4	4.2	15	15.8	95
중졸	110	59.8	47	25.5	13	7.1	14	7.6	184
고졸	207	69.7	50	16.8	24	8.1	16	5.4	297
대졸이상	52	75.4	13	18.8	2	2.9	2	2.9	69
주재배작목									
수도작	196	63.2	65	21.0	22	7.1	27	8.7	310
과수	67	74.4	14	15.6	7	7.8	2	2.2	90
노지채소	26	59.1	8	18.2	6	13.6	4	9.1	44
축산	50	70.4	16	22.5	1	1.4	4	5.6	71
시설원예	57	75.0	11	14.5	4	5.3	4	5.3	76
특작	30	63.8	11	23.4	2	4.3	4	8.5	47
기타	9	60.0	3	20.0	1	6.7	2	13.3	15
계	**435**	**66.6**	**128**	**19.6**	**43**	**6.6**	**47**	**7.2**	**653**

○ ‘농림부로의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에게 농림부의 부처명 개칭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과반수(48.1%)농업인이 ‘농업・생명산업부’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농식품부’(24.9%), ‘농업・식품농촌부’(16.0), ‘농업・농촌부’(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업・생명산업부’라고 응답한 계층은 연령별로는 60세 미만에서,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작목별로는 축산농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24. 농림부로의 일원화시 부처 명칭 의견

(n=680, 단위 : 명, %)

	농업식품농촌부		농업농식품부		농업생명산업부		농업농촌부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나이											
60세미만	26	12.2	50	23.5	116	54.5	14	6.6	7	3.3	213
60세이상	45	19.4	61	26.3	98	42.2	19	8.2	9	3.9	232
학력											
무학	.	.	1	100.0	.	.	.	.	.	.	1
한학	.	.	1	25.0	3	75.0	.	.	.	.	4
국졸	13	21.0	13	21.0	31	50.0	4	6.5	1	1.6	62
중졸	20	17.7	30	26.5	46	40.7	14	12.4	3	2.7	113
고졸	32	15.0	56	26.3	106	49.8	11	5.2	8	3.8	213
대졸이상	6	11.5	10	19.2	28	53.8	4	7.7	4	7.7	52
주재배작목											
수도작	35	17.7	49	24.7	89	44.9	17	8.6	8	4.0	198
과수	6	8.8	18	26.5	33	48.5	8	11.8	3	4.4	68
노지채소	9	32.1	6	21.4	12	42.9	1	3.6	.	.	28
축산	9	17.6	9	17.6	29	56.9	3	5.9	1	2.0	51
시설원예	9	15.5	13	22.4	30	51.7	4	6.9	2	3.4	58
특작	2	6.3	11	34.4	18	56.3	.	.	1	3.1	32
기타	1	10.0	5	50.0	3	30.0	.	.	1	10.0	10
계	**71**	**16.0**	**111**	**24.9**	**214**	**48.1**	**33**	**7.4**	**16**	**3.6**	**445**

제 5 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 구조화된 조사문항 이외에 농업인이 바라는 농업·농촌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토록 해 농업인의 농정에 대한 여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의견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히 제기되었으며, 각 현안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1.1. 개황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농업인들의 농업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 중 분야별로 정리된 의견은 총 296건으로 전년보다 46건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이 78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영농자금, 농가부채에 대한 건의가 55건으로 무려 49건이나 증가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 쌀산업정책과 관련한 의견도 53건이 제기돼 쌀 협상과 관련해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많은 관심을 보였던 협동조합 등 농업 관련기관과 관련한 의견은 31건이 줄어든 7건에 불과하였다.

○ 제시된 의견 중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의 농정을 요구하였고, 농업정책의 홍보에 대한 부족,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한 여론도 많았다. 쌀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쌀값하락 방지, 공공비축제에 대한 비판 등의 의견 및 농가부채를 탕감해주기보다는 농민들의 미래설계에 따른 지원, 장기 저리자금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이 밖에,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젊은 후계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요망하였으며, 농업개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농업의 피해에 대해 이득을 보는 산업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협상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농지은행제도의 확대와 도시민의 농지소유 허용에 따른 투기 우려 등의 의견도 많았다.

1.2. 농업인의 농정건의 요지

분야	건수	요지
농업정책 전반	78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정책의 일관성, 농업정책 홍보의 필요성, 농업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 필요, 현실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도 제고 필요
영농자금, 농가부채	55	농가부채 탕감보다는 미래를 설계해줘야, 장기 저리자금 지원, 농가부채의 경감조치
쌀산업 정책	53	안정된 쌀정책 요구, 쌀값하락 방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확대, 공공비축제의 비효율성, 추곡수매제의 부활 요구
농산물 유통, 가격	19	농산물 유통 개혁, 수입 농산물 유통 단속, 유통부문의 농협기능 강화
농지정책	22	휴경농지의 정비, 농지은행제도의 확대, 도시민 농지소유에 따른 투기우려
농업개방 국제협상	14	공산품 수출 이익금 농촌 환원해야, 대체 작목 개발을, 협상 결과의 투명한 공개
농촌인력, 후계인력	18	젊은인력 농촌 유인책 필요, 고령화에 대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농촌지역개발, 복지	11	고령화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주택개량, 의료복지정책, 교육문제 해결
영농자재	13	농기계 구입 보조, 농약에 대한 가격정찰제, 경작면적에 따른 면세유의 차등배정
농업기관	7	농협의 대단위 합병 유도, 농업기술 개발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영농환경개선	6	농로 확포장, 축산폐수용 정화조 확충, 경작할 농지에 대한 기반공사를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2.1. 농업정책 전반

○ 더욱 많은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 농업이 경제의 논리에 밀려 소외받지 않는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 수립에 힘써야 한다.
○ 농촌의 지원정책에 대한 확대가 요망된다.
○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직접 보상도 좋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 국가의 정책이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소득 안정이 요구된다.
○ 일관된 농업정책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부탁한다.
○ 농업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농업정책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 농업정책의 단위별 홍보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한 수익금이 농민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수입 농산물의 철저한 검사와 농산물 차액 보상을 100%지원해야 한다.
○ 대체농사를 짓는 농민의 어려움 고려해야한다.
○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소농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농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 농촌 상생정책의 수립으로 농촌인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 농민의 고령화로 농사에서 은퇴하는 농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밭농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정부는 하루빨리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 정부가 농민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 정부지원하에 농촌을 살려야 할 것이며, 여러 분야별 지원으로 농산물을 살려야 한다.
○ 농업직불제 및 영농자재대 등의 일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농업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이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
○ 농업정책이 좀 더 농민들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 최근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 문제로 농촌은 더욱더 큰 혼란에 빠져있으며 앞으로의 작목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농촌의 부흥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 정책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이제 한국 농업정책은 정말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출 때라고 생각한다.
○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재배면적 등 전업농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 각종 공산품은 모든 것이 값이 오르는데 반해 농산물만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 농가소득안정, 소득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 개발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끼워맞추기식 정부의 농정을 믿지 못하겠다.
○ 농산물 수입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농민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방책이

필요하다.

○ 농업정책 홍보가 농민에게 전달되기 위해 교육시스템 등이 요구된다.

○ 농촌 내 소득격차의 심화로 이웃 간의 갈등 심화되고 있지만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농외소득의 창출이 힘들다.

○ 농업정책이 너무 급하게 돌아간다.

○ 농업정책이 많이 보완 수정되기를 바란다.

○ 농산물 수입과정을 정부가 통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쌀소득직불제를 없애 벼수매하는 수량을 보조해 주었으면 한다.

○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도 '규격미달'이란 명목을 달아 보상이 힘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령자에 맞는 농업정책이 요구된다.

○ 식품관리를 농림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농업생명산업부로 하면 좋겠다.

○ 공산품 수출에 대한 이익부분을 농업에 환원해 주기를 바란다.

○ 모든 농정을 말로만 하지 말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천하여주기 바란다.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투융자되는 119조원의 운영이 과거 시행됐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 농촌에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령층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농업정책의 구조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 개방하되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 농업정책에 대해 정부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농민들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

○ 기업농과 전업농가에는 정책적인 자금만 지원하고 자작농에게는 농가유지비를 복지 측면에서 지원했으면 한다.

○ 농업정책은 농업전문인의 의견 수렴을 통한 단계별로 농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농업과 농촌의 구체적인 소득보존에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 농업 정책 모두가 농촌현실과 전혀 다른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다.
○ 노령화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 농지은행법을 농민들에게 알려 잘 활성화시켜주길 바란다.
○ 농민이 신뢰가 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다.
○ 농업 정책 전반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업인에게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 장기적인 농업정책이 요구된다.
○ 대부분이 저학력이라는 점에서 친환경농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무농약 과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거 같다.
○ 어렵게 저농약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도리어 예년에 비해 폭락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친환경농산물 취급기회는 적고 납품가는 낮고 소비자가는 높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농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며 또한 이러한 상품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일반관행 농산물 보다 가격이 낮다.
○ 친환경농업 위주로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간 혼선이 깊어지고 불신만 생길까 우려된다.
○ 기업과 농촌에 대해 차별화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농업정책 전반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
○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소득이 낮아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2. 영농자금, 농가부채

○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탕감해 주어 농촌경제를 살려

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농업소득안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 농가부채탕감보다는 농민들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정부는 농작물 재해 보상금의 현실화, 농업재해보험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 확대, 논농업 직불 및 밭농업 직불금 확대가 요구된다.

○ 농가부채의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 농가부채 경감차원에서의 자금대출 금리 인하가 되어야 한다.

○ 쌀 직접지불제 확충은 물론 축산분야도 직접 지불제를 해야 한다.

○ 과수농가에게 농기계의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 농가부채를 탕감시켜주길 바란다.

○ 영농자금의 확대가 요구된다.

○ 농가부채를 장기분할로 상환해 주고 금리인하를 해주길 바란다.

○ 농가부채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 농민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의 지원을 위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현재의 저금리 장기상환방법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길 바란다.

○ 늘어나는 부채, 농자재의 가격 상승 등은 농민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다.

○ 저금리자금이라도 개인자금 연체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연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영농자금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희망금액을 지원받아야 한다.

○ 농어촌부채저리대체자금의 연장과 동시에 이자를 낮추어 상환키로 하였으면 좋겠다.

○ 농업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부채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농가부채로 시설확충 및 경영압박이 속출하고 있다.

○ 선진국처럼 직불금을 대폭 상향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방책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에서 농가부채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 부채없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농가부채의 연기 및 분할상환이 필요하다.
○ 농촌에서 융자지원을 받아 특수작물을 재배하지만 불안정한 가격으로 농가부채가 발생돼 이에 대한 방책마련이 요구된다.
○ 농가부채에 대한 지원은 소규모 농지 1000평~2000평 영농자의 실태 조사를 하여 이들에게 지원해 나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 현재 농촌은 농가부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며 이것의 원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 농가부채상환이 도래해 2006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방책마련이 시급하다.
○ 농촌인력 및 후계인력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 어려운 현 농촌실정에서는 생활비 및 부채 상환을 겨우 해결하는 정도로 보증채무를 갚기에는 너무 힘들다.
○ 영농자금의 상환을 분할로 갚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 농가부채를 전액 탕감하고 농촌을 재편성해주길 바란다.
○ 농산물 다양화에 따른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한다
○ 농촌을 관광자원화하고 도시생활의 휴식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영농자금 지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영농자금 지원이 농촌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 농가부채에 대한 경감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 농촌은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등의 방송매체들은 소비를 촉진하려고만 해 위화감이 조성된다.
○ 농업자금 한도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다.
○ 영농자금에 대한 농가부채의 이자를 인하하고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 농사를 짓기 위해 저리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 초기의 영농자금보다 현재는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일관성이 없어졌다.

○ 영농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한다.
○ 주5일제 실시,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된다.
○ 영농자금 및 농가부채에 대한 금리를 낮춰야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살기 좋은 농촌이 될 것이다.
○ 쌀 가격하락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방책마련이 시급하다.
○ 농촌부채 해소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영농자금의 확대, 농가부채의 저금리, 상환기간의 확대 및 연장이 요구된다.
○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해 회생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촌 부채가 늘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공적자금이나 농가부채 채권을 발행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 공적자금을 농가부채에 투입하는 등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 논농사 직불금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밭도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주길 바란다.

2.3. 쌀산업 정책

○ 정부에서 쌀 수입 개방을 국가적 차원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을 세워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
○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쌀을 비축하고 안정된 쌀정책을 펼쳐야 한다.
○ 동일가격을 통한 쌀값 하락을 방지해 주기 바란다.
○ 추곡수매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
○ 규모화를 시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쌀 생산 보조사업에 힘써 쌀산업을 유지시켜야 한다.
○ 정부수매가와 공공비축미의 차액이 직접지불제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그 차이가 크므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쌀산업의 안정정책은 직불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쌀값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확대해서 쌀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수입 쌀을 식량부족국가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생산을 하고 그 외 지역은 농촌지역개발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주기 바란다.
○ 쌀 생산조정제인 휴경지를 40%까지 실시해야 한다.
○ 농업·농촌의 지원 방안도 없이 쌀비준안 국회통과는 농촌·농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 쌀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 쌀농업직불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 공산품 수출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농업분야에 환원해 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쌀값의 안정이 요구된다.
○ 쌀값 하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벼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인상해야 한다.
○ 농촌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 공산품 수출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는 농촌회생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쌀산업 정책을 세우고 직접지불제 단가를 8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 쌀비준안이 통과되었으나 벼 재배농가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 쌀산업 개방에 따른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민을 위한 방안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가소득 보전액을 상향조정하여 120만원으로 올려 지원해야 한다.
○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쌀을 수매해 주고 농가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
○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 사후 조치를 잘 해 주기 바란다.
○ 정부에서 공공비축제를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한다.

○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직불제를 더 올려 농가소득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 정책 입안자들은 현실에 대해 직시해야 할 것이며 농민의 고충을 제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 남는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여 쌀 소비를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다.
○ 각 농촌마을에 농협창고를 확보하여 농협에서 구입 판매를 일원화해야 한다.
○ 정부에서 쌀 생산량의 50%를 수매해야 한다.
○ 국제정세에 따라 개방은 해야 하지만 농민의 불안감을 줄여줘야 하겠다.
○ 쌀시장 개방화에 따른 쌀값하락분에 대해 과감한 직불금 인상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출하한 산물벼에 대해서는 차액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는 깊이 파인 농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지난해까지 시행하고 있는 휴경지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관세화로 가야한다.
○ 쌀산업정책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농민이 마음 놓고 벼농사만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쌀산업정책은 다른 농업정책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쌀 협상 비준안 통과 문제 대하여 정부는 사후대책을 마련해놓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지원하는 119조 예산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금과 별도이어야 한다.
○ 우리 농촌에는 농외소득이나 농가에 직접 보전이 되거나 항구적으로 농촌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쌀 가격을 전처럼 동일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 정부에서 금년산 추곡을 공공비축제를 적용 수매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 쌀 생산조정보조금제도가 계속 확대 유지되길 바란다.
○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쌀값은 떨어지고 다른 자재값은 올라서 힘들다.
○ 추곡수매제를 다시 부활시켜 주었으면 한다.

2.4. 농산물 유통, 가격

○ 농산물을 중간상인에게 속아 파는 경우가 허다해 이에 대한 방책마련이 요구된다.
○ 농산물 유통비를 정부에 부담해주었으면 한다.
○ 정확한 통계를 통한 생산 수요조절로 가격 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
○ 도시별 청과물시장에서 경매를 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란 힘들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농협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에서 직거래 판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현재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 농산물 유통에 중간상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가 농협 중심의 유통체계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농민들이 가장 힘든 것은 농산물 가격으로 중간유통을 통한 산지와 소비지 가격차가 너무 크다.
○ 반드시 농산물 유통 판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산물 품목별 산지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 수입 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며 유통부분은 농협이 책임지고 시판 유통하며 중간상인이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와 상부상조하는 농업이 되기를 바란다.
○ 농축산물 가격기준을 생산비와 비교를 해서 산정해야 한다.
○ 저온저장 창고를 지역별 또는 작목반별로 건축해 주기 바란다.
○ 소비자 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를 줄여 주면 좋을 것 같다.
○ 농민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만 집중하고 생산된 농축산물은 정부가 농축협을 통해 전량 판매를 책임져야 한다.
○ 농산물 가격이 거의 중간상인에 의해 정해진다.

○ 어떤 품목이든 수입으로 많은 양이 들어오면 자연 국내 생산 유통, 판매에 영향을 주기 마련으로 작목에 대한 선택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는 최저가격 안정만 될 수 있다면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2.5. 농지정책

○ 앞으로 20년 후에 농지가 황무지화 되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바 농정시책을 바꿔야한다.
○ 형평에 맞지 않는 농촌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없애고 농촌도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좋은 농지가 휴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 농지가격이 너무 낮아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 농사를 지을 의향이 있으면 국민누구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를 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민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투기가 우려되므로 경작자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된다.
○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농산물 수송이 어렵다.
○ 활용 가능 농지는 시급히 농로관배수시설 등 기반 완료하고 여건 불리 농지는 전용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인의 농지소유 조건의 규제를 완화하면 자유로운 조화 경쟁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 휴경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절대농지에는 축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 수도작에 집중되어 있는 농지정책에서 앞으로는 전작이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있었으면 한다.
○ 마음대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지역의 해제를 요구한다.
○ 농지정책 자주 변경되어 이해하기 힘들다.

○ 농지법을 완화하여 농지 구입을 수월하게 해 농가부채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신뢰할 수 있는 농정수행이 요구된다.
○ 임대나 임차농지가 많아지면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축사로 20년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 농지 이용관련 법을 폐지해야 하고, 허가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 농지의 매매를 자유롭게 해야 하고,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 전업농민만 농지를 소유케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반드시 농가별 1/3의 농지를 의무적으로 휴경작하고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농지로 만들기 위한 1년간 휴경작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 농업 진흥 지역에서 산간지는 해제시켜 줘야 한다.
○ 농지은행제도를 확대하여 고령화되는 인력에겐 명예은퇴를, 젊은 사람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6. 농업개방 국제협상

○ 대체 작목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 현재 여건에 는 농산물 창출이 요구된다.
○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데 농자재와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 힘들다.
○ 농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바란다.
○ 농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산품의 수출에 의한 이익금을 농촌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 농업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이 피해보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기 바란다.
○ 지금은 농민의 의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 보장과 지원대책의 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농산물 수입관세를 농촌에 투자하여 농촌의 어려운 여건과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쌀시장 개방 유예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손실보상 대책 없이 협상에 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 농촌인력, 후계인력

○ 정부는 쌀직불제 확대와 보조금 확대 등으로 농촌을 살려 희망을 주어 농촌후계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 농촌 인력부족으로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가격 하락으로 걱정이 된다.
○ 후계자에게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 농촌인력의 후계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민의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후계인력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려하지 않을 것이다.
○ 농촌의 여건도 문제지만 농업인력 부족이 더 심각함을 알고, 속히 후계인력에 대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장래가 밝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요구된다.
○ 고령화된 농촌이 젊은 농촌으로 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 현재 농촌의 인력구조가 매우 어려움을 알고 앞으로 후계 인력이 농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후계인력 양성과 새로운 농촌정책이 필요로 한다.
○ 농촌의 노령화 심화와 젊은인력이 부족하다.
○ 농촌 노령화로 인한 후계자가 부족하다.
○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 앞으로 젊은 후계자들의 유치를 위해 교육 여건의 조성과 농업의 소득증대에 노력해 농촌으로의 유입인구를 늘려야 한다.
○ 농촌인력은 심각한 상태이다.
○ 말로만하는 농촌 인력 양성말고, 실제로 젊은 인재가 농촌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8. 농촌지역개발, 복지

○ 보건소가 없는 지역은 마을이장이 상용약품이라도 비치하였으면 한다.
○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해야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 농민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수용하고 해결해주어야 한다.
○ 농촌에 주택을 개량해 주고 의료시설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
○ 농촌의 소득은 주는데 반해 텔레비전시청료, 컴퓨터, 교육비 등의 비용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 산간 농촌지역의 개발이 요구된다.
○ 영농에 있어 일부 젊은 영농층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심화될 것이라 판단된다.
○ 의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최소한 읍단위에 대해선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 농촌공동화에 대비한 정책 수립이 농촌 문제에 있어 가장 긴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 농촌의 소득과 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2.9. 영농자재

○ 농업을 하는데 농기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지해 어려움이 많다.
○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 영농자재가 너무 비싸고, 농기계 임차료 역시 계속 상승해 적정선이 유지되

도록 정책입안이 요구된다.

○ 정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기계 및 비료, 자재 등의 지원으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영농자재 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길 바란다.

○ 농촌은 대형농기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어 구입이 용이토록 해 주어야 한다.

○ 농약에 대한 정찰가격제를 시행해 소비자가격을 표기해주길 바란다.

○ 퇴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전업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 보조금이라도 늘려 주었으면 한다.

○ 농기계 보조금의 지원이 요구된다.

○ 농자재값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농업용 기계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 배정을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주기 바란다.

○ 농업용기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2.10. 농업기관

○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

○ 농업 관련 단체들이 무방비 상태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밭기반 공사에 있어 실효성 없는 사업 중 하나는 ‘양수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농협의 대단위 합병을 유도해야 한다.

○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을 지역 단위농협에서 수매했으면 한다.

○ 농업기반공사의 노령화 보조금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발된 농업기술개발정보를 농가에 적극 보급하며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2.11. 영농환경개선

○ 중산간지대의 농지 중 농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으며, 최소한 농기계 정도는 농지에 자유롭게 오가도록 대책 세워줘야 한다.
○ 농업용수 등 농촌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 농로가 좁은 곳은 더 확장해 주고 반영구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 향후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경작할 농지에 대해서만 기반공사를 해야 한다.
○ 각 마을별 축산 폐수용 정화조가 확충되어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라고 하여 쓸데없는 국고낭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제 6 장

요약 및 시사점

○ 이 보고서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680건(유효응답률 34.0%)의 조사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 이 조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실시해 온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2005년 이슈가 되었던 농정 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특히, 2005년 조사는 농업인 의식변화와 함께, 쌀관세화 개방 유예 확정에 따른 쌀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대응의지를 파악하였고, 농업·농촌종합대책 등 주요 농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 친환경 식품안전 수요에 대한 농가의 대응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 2005년에 농업인들이 느끼는 5년 전 및 전년과 비교한 농촌생활수준 인식은 2004년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낮아져 5년 전 및 전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각 17.0%, 5.2%에 머물렀다.

○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도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농업인 비율은 전체의 6.8%로 전년보다 1.0%p 소폭 감소하였고, 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한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비교에서는 10명 중 8명(86.7%)이 ‘도시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해 도-농간 소득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 농촌생활 만족도는 10명 중 1명(9.5%) 정도가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고 응답하였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7.5%)는 그 요인을 ‘교육여건 열악’(26.2%),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5%), ‘복지시설 미흡’(18.7%), ‘주거 환경의 열악’(16.2%) 순으로 꼽았다.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이 17.1%로 전년에 비해 3.4%p 감소하였으며,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 포함)’는 응답은 47.5%로 전년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7.4%p 증가하는 등 지난해 20%를 회복했던 만족도가 다시 하락하였다.

○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7.5%)는 불만족 요인으로 ‘장래불안’을 가장 많이(46.8%) 꼽아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한 불안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고 규모가 큰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77.5%인 524명이 ‘계속 살겠다’고 대답하였고, 9.8%의 농업인은 ‘농촌을 떠나겠다’고 답해 농업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농촌계속 거주 의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 2005년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추곡수매’가 26.9%로 기존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농산물 가격 변동’과 ‘농산물 수입개방’을 앞섰다. 이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변화를 연도별로 종합해 보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2005까지 25%대를 유지하고 있다.

○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 조사에서는 '농촌인력부족'(21.6%)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21.4%),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13.0%), '농산물 수입개방'(11.0%) 등의 순으로 꼽았다.

○ 2006년 농업경영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73.2%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해 전년(63.8%)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한 비율이 9.4%p나 증가하였다.

2.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쌀산업에 대한 의식

○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농업인 과반수 가까이(47.6%)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부적절한 선택'(24.0%), '최악의 선택'(15.9%), '아직 평가하기 이른 사안'(11.4%), '최선의 선택'(1.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쌀 재협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인식(48.6%)이 부정적인 인식(39.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의 현실인식이 작용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쌀 협상 비준안 통과로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신인도 유지로 향후 국제 협상에서 불이익 최소화'(40.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입쌀과의 전면 경쟁으로 인한 당장의 피해 최소화'(34.4%), '관세화 유예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확보'(21.0%)라고 응답하였다.

○ 쌀 협상 비준안 통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반수가 넘는 농업인(52.9%)이 '수입쌀 시판으로 국산 쌀값 하락과 벼농사 기반 잠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쌀농사 포기 등으로 농촌 황폐화'(29.6%), '농업인의 농정불신 심화로 향후 정부정책 시행 차질 불가피'(16.6%)로 나타났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 이후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과반수 농업인

(63.0%)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방안 마련’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시장성 있는 대체작물 개발, 육성안 마련’(14.4%), ‘쌀자급률 목표 설정 등 중장기 대책 제시’(12.8%), ‘국산쌀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 운동’(9.1%)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업인들은 쌀 관세화 개방 유예에 따라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부의 대책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계획’(32.6%), ‘수확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과 브랜드 관리’(16.5%), ‘가격 경쟁력 제고’(5.5%) 등 적극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농업인은 54.0%로 10명 중 5명 정도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업인들에게 2002년 10월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이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가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농가가 59.7%(‘매우 도움이 됨’ 3.7%, ‘어느정도 도움이 됨’ 56.0%)로 나타났다.

○ 반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은 38.3%(‘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33.5%,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4.8%)로 나타나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

○ 2005년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60.2%), ‘지역별 가격 적용’(33.7%) 순으로 응답했다.

○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을 선호한 계층은 연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의 영세농에서, 경작규모가 1.5ha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영세농일수록 도별 매입가격의 차가 발생하는 지역별 가격 적용방식보다는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출범 초기에 비해 ‘높은 편’(매우 높

은 편 합산)이라는 응답은 11.6%인 반면, '낮은 편'(매우 낮은 편 합산)이라는 응답은 47.0%로 과반수에 가까운 농업인들이 현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출범초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정책(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대 등)'을 최우선으로(67.9%)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촌정책'(17.4%), '농업정책'(14.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119조원 투융자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20.0% 나타났으며, 38.5%는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6%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투융자 사업이 확대되길 바라는 분야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최우선으로(12.3%)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9.9%),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9.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8.1%),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7.3%), '농업생산기반 정비'(6.9%) 등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역점 추진한 쌀산업정책 중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벼재배농가 소득 안정 대책'(3.2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로 '품질경쟁력 제고'(2.8점), '수급균형 유지'(2.4점), '양정제도 개편'(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내용 중 농업인들은 '복지기반 확충'(3.3점)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역개발 촉진'(2.6점), '교육여건 개선'(2.5점), '복합산업 활성화'(2.0점)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0월 25일 농어촌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 1,976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과반수이상인 60.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5%는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들은 찬성 이유로, '좋은 교육 환경으로 질 높은 수업'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인 60.7%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의욕 고조'(23.3%), '올바른 사회성과 인격형성 도움'(7.0%), '폐교를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가능'(3.4%) 등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중 67.2%가 친환경 농업을 일부라도 실천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과반수의 농업인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68.7%)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전략' (15.8%), '환경오염 감소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산물 재배 기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99.7%가 '알고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친환경 재배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의 인식정도는, 과반수인 64.9%가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20~29% 정도 높다'(14.3%), '30~39% 이상 높다'(4.2%) 순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낮다'는 응답도 15.8%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실천 이후 일반농업에 비한 소득변화는 '비슷하다'(45.7%), '감소한다'(28.6%), '증가한다'(25.7%) 순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에 대해 64.9%가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소득변화는 '비슷하다' 또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른다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려면 가격차별화와 함께 유통망 확충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영농규모 확대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규모 유지'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확대예정'(26.5%), '축소 예정'(11.7%) 순으로 나타났다.

○ 2006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는 농업인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른다'

(36.9%),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9.3) 순으로 나타났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참여의향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인 75.9%은 ‘지원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즉시 참여하겠다’(18.5%), ‘참여하지 않겠다’(5.6%)를 나타냈다.

○ 2006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2.3%가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고 응답하였고,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6.8%)이 ‘지원 내용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즉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16.8%, ‘참여하지 않겠다’는 6.4%에 그쳐 대다수가 지원 내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김치 파동’과 같은 식품안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식품 안전관리를 농림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응답자 10명 중 6명(66.6%)이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건복지부로 일원화’(19.6%), ‘잘 모르겠다’(7.2%), ‘제3의 부처나 기구로 일원화’(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림부로 일원화’라는 응답자는 절반가까이 (48.1%)는 ‘농업·생명산업부’를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농업·농식품부’(24.9%), ‘농업·식품농촌부’(16.0), ‘농업·농촌부’(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농업인 농정건의 등 여론

○ 자유의견란을 통해 제시된 농업인들의 농업정책 건의와 농업·농촌에 대한 의견 중 분야별로 정리된 의견은 총 296건으로 전년보다 46건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이 78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영농자금, 농가부채에 대한 건의가 55건으로 무려 49건이나 증가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 쌀산업정책과 관련한 의견도 53건에 달해 논란 끝에 마무리된 쌀 재협

상에 따른 관심 증가로 보이며, 전년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협동조합 등 농업관련기관과 관련한 의견은 31건이 줄어든 7건에 불과하였다.

5.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농촌생활 만족도와 농업종사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진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농업개방 논의의 확대와 쌀 협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정부가 농업정책 우선순위를 '소득안정'에 투고 직접지불제 등에 투융자를 확대해 주기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득정책과 농촌정책, 농업정책 등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 설정에 다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농업인들은 또 쌀 관세화 개방 10년 유예라는 쌀 협상 결과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입 쌀 시판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입 쌀 시판에 대응한 우리쌀 우수성 홍보와 판매 촉진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농업인 10명 중 6명(60.2%)이 찬성 의견을 밝힘으로써 농촌지역 교육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이 '교육 여건의 개선'을 포함한 농촌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친환경 농업을 일부라도 실천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보다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이들의 소득변화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전후가 '비슷하다' 또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려면 가격차별화와 함께 유통망 확충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 록

조사표

「2005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에 즈음하여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 현장에서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연구원의 조사업무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를 올해도 실시하게 되어 설문지를 우송합니다.
본 조사는 농정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2005년 12월 18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통신원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 정 섭**

■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

1) 귀하는 5년 전에 비해 올해(2005년)의 '농촌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2) 작년(2004년)과 비교해 올해(2005년) '농촌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3) 올해(2005년)와 비교해 5년 후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②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③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4) 도시와 비교해서는 5년 후 농촌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② 도시만큼 살게 될 것이다
③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 5), 6)번 문제 관련

< 보기 >

① 농산물 가격 ② 추곡수매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④ 농산물 수입개방 ⑤ 농촌지역개발
⑥ 농촌인력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 ⑧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⑨ 영농시설 현대화 ⑩ 농지문제(매매, 가격, 진흥지역, 임대차 등) ⑪ 기타

5)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6)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위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7) 올해와 비교해 내년(2006년) '농업 경영여건'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② 올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③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8)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8-1) (문 8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귀하는 농촌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 열악 ② 자녀 교육 여건 열악
③ 체육·보건 의료 시설 등 복지시설 미흡 ④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⑤ 기타 (　　)

9)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9-1) (문 9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소득 보장 미흡) ②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④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 불안
⑤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 ( )

10)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입니까? ( )

① 농촌에 계속 살겠다 ②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③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올 생각이다 ④ 모르겠다

10-1) (문 10에서 ②③번에 답하신 분만)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② 농사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직업을 변경하여 돈을 벌기 위해
③ 농촌의 생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변해서
④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이 어려워서
⑤ 농사규모를 늘려 갈 전망이 없어서
⑥ 자녀들이 도시에 정착해 있어서
⑦ 농촌에는 농사이외에 할만한 일이 없어서
⑧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⑨ 기타_____

11) (문 10에서 ②③번에 답하신 분만) 농촌을 떠나신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
① 1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⑤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쌀산업에 대한 의식

12)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10년간 쌀시장 완전 개방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쌀 의무수입 물량은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귀하는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최선의 선택 ② 불가피한 선택 ③ 부적절한 선택
④ 최악의 선택 ⑤ 아직 평가하기 이른 사안

13) 쌀 협상 비준안 통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관세화 유예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확보
② 수입 쌀과의 전면 경쟁으로 인한 당장의 피해 최소화
③ 국가 신인도 유지로 향후 국제 협상에서 불이익 최소화
④ 기타 ( )

14) 쌀 협상 비준안 통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수입 쌀 시판으로 국산 쌀값 하락과 벼농사 기반 잠식
② 농업인의 농정불신 심화로 향후 정부 정책 시행 차질 불가피
③ 벼농사 포기 등으로 농촌 황폐화
④ 기타 (　　)

15) 쌀 협상 비준안 통과 이후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방안 마련
② 쌀 자급률 목표 설정 등 중장기 대책 제시
③ 시장성 있는 대체작물 개발, 육성안 마련
④ 국산 쌀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 운동
⑤ 기타 (　　)

16) 쌀 협상 비준안 통과에 따라 귀하는 어떤 자구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　　)
① 수확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과 브랜드 관리
② 최대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③ 벼농사 포기후 대체작물 개발
④ 농사 포기 후 전직 등 고려
⑤ 정부의 대책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계획
⑥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계획 없다
⑦ 기타 (　　)

17) 귀하는 쌀시장 관세화 유예와 수입 쌀 시판 등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내년(2006년) 벼 재배면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축소할 계획이다　②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③ 확대할 계획이다
④ 정부의 소득보장 대책을 보고 결정　⑤ 잘 모르겠다

18)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③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⑤ 모르겠다

☞ 19), 20)번 문제 관련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쌀 매입가격 적용방식을 두고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안과 △지역별(도별)가격 적용안 등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안은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을 시가로 정해 비축미를 사들이는 방식이며, 지역별(도별) 가격 적용안은 수확기 도별 평균쌀값을 시가로 정해 비축미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도별로 매입가격 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귀하는 위에 제시한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　② 지역별(도별) 가격 적용　③ 모르겠다

20) 귀하는 위에 제시한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　　)
① 전국 동일(단일)가격 적용　② 지역별(도별) 가격 적용안　③ 모르겠다

■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21) 귀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22) 귀하는 현재 시점에서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출범(2003년 2월) 초기와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아졌다 ② 높아진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아진 편이다 ⑤ 매우 낮아졌다

23) 귀하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에 비추어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정책: 시장 지향적 구조개편, 고품질농업 육성, 성장 동력 확충 등
② 소득정책: 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대 등
③ 농촌정책: 농촌지역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인프라 확충 등

24) 정부는 2004년 2월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119조원 투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투융자사업들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②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잘못 추진되는 것 같다　⑤ 매우 잘못 추진되고 있다

25) 귀하가 금년에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시설 구입 등의 보조금	원
논농업직불 등 직접지불 보조금	원
학자금 보조 등 생활 보조금	원
합 계	원

26) 귀하는 정부가 다음 각각의 농업정책을 얼마나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못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편	잘 못 하 고 있는 편	매우 잘 못하고 있다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				
②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				
③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				
④ 전문농업인력 육성				
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⑥ 친환경농업 육성				
⑦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				
⑧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⑨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혁신				
⑩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				
⑪ 재해보험 등 경영 안정 지원				
⑫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⑬ 마을 정비 등 농촌지역 개발				
⑭ 교육여건 및 의료 서비스 확충				
⑮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				

27) **위 항목** 중에서 향후 투융자가 확대되길 바라는 사업(분야)을 **세 가지만 골라** 번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8) 귀하께서는 올해('05년) 정부가 역점 추진한 쌀산업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순서대로 1, 2, 3...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긍정평가 순
①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구축 등 품질 경쟁력 제고	
② 추곡약정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③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대책	
④ 쌀 적정생산 유도 및 소비 촉진 등 수급 균형 유지	

29) 귀하께서는 올해('05년)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내용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순서대로 1, 2, 3.....으로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긍정평가 순
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확대 등 복지기반 확충	
② 학자금 지원 확대, 농촌 우수고교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③ 농촌마을 종합개발, 마을리더 육성 등 지역개발 촉진	
④ 농촌관광 확대, 향토산업 육성 등 복합산업 활성화	

☞ 30)~30-2)번 문제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25일 농어촌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 1,976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 기준은 ① 초등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 본교와 20명 이하 분교 ② 중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 본교와 전체 분교 ③ 고등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 본교가 해당됩니다.

30) 귀하는 이 같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르겠다

30-1) 문 30에서 ①번 응답자만)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 환경이 좋아져 학생이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② 올바른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도움이되므로
③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의욕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④ 폐교를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⑤ 기타 (자세히:　　)

30-2) 문 30에서 ②번 응답자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농촌인구 감소 등에 따른 농어촌살리기 정책과 배치
② 원거리 통학 등 어린학생 교육여건 악화
③ 교육여건 등 무시하고 학생 수만으로 통폐합 결정
④ 시골의 유일한 문화적 공간인 학교 폐쇄로 정서적 피해
⑤ 기타 (자세히:　　)

■ 친환경 농업,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31) 귀하께서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　　)

① 그렇다(농사의 일부 포함)　　② 아니다 ☞ **문 38번으로**

32) 귀하는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

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② 환경오염 감소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
③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전략
④ 종교적 차원의 신념으로
⑤ 기타 (　　)

33) 귀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34) 귀하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

① 오히려 낮음　② 10%～19% 정도 높음
③ 20～29% 높음　④ 30～39% 이상 높음　⑤ 40% 이상

35) 친환경농업 실천 이후 관행에 비해 소득은 어느 정도 증가(감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증가한 경우(　　) %　② 감소한 경우(　　)%　③ 비슷하다

36) 친환경농업 실천시 애로 사항을 우선순위로 3가지만 골라주세요(　　,　　,　　)

① 재배 기술 미흡　② 노동력 과다소요　③ 퇴비확보의 어려움
④ 판매가격 불안정　⑤ 판로개척 어려움　⑥ 운영자금 부족
⑦ 재배시설 낙후　⑧ 상품성 유지 곤란　⑨ 기타

37) 향후 친환경농산물 영농규모 확대 의향은 어떻습니까? (　　)

① 확대 예정　② 축소 예정　③ 현재규모 유지

38) 내년('06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참여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해당 문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인지도	①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 ②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　　) ③잘 모른다(　　)	①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 ②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　　) ③잘 모른다(　　)
참여의향	①즉시 참여하겠다(　　) ②참여하지 않겠다(　　) ③지원 내용 보고 결정(　　)	①즉시 참여하겠다(　　) ②참여하지 않겠다(　　) ③지원 내용 보고 결정(　　)

39) '김치 파동'과 같은 식품안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식품 안전관리를 농림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농림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③ 제3의 부처나 기구로 일원화 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39-1) 문 39에서 ①번 응답자만) 농림부로 일원화한다면 농림부 명칭은 다음 중 어떻게 개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업・식품농촌부　② 농업・농식품부　③ 농업・생명산업부
④ 농업・농촌부　⑤ 기타 (자세히:　　)

※ 끝으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타 의견란이나 별지를 이용해 적어 주십시오.

■ 기타 의견

분야	①농업정책 전반 ②농산물 유통, 가격 ③농업개방 국제협상 ④쌀산업 정책 ⑤영농자금, 농가부채 ⑥농촌인력, 후계인력 ⑦농지정책 ⑧영농자재 ⑨농업기관 ⑩농촌 지역개발, 복지 ⑪영농환경개선 ⑫기타
쓰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제시한 것 중 몇 번에 해당합니까? (　　번) 내용 기재 ☞	

■ 현지통신원 개인 정보

A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道, 또는 광역시

A2>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　　)

① 평야지대　② 산간지대　③ 준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세 입니까? (만　　세)

A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A5> 귀댁의 연평균 소득(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 중 임차료·비료·농약대 등 비용은 제외하되, 생활비는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만원미만　③ 2천만원~3천만원미만
④ 3천만원~4천만원미만　⑤ 4천만원~5천만원미만　⑥ 5천만원 이상

A6> 귀하의 영농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0년 미만　② 10~20년 미만　③ 20년 이상

A7> 귀댁의 전체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

(소유 및 임차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① 없다　② 1,500평 미만　③ 1,500-3,000평 미만　④ 3,000-4,500평 미만
⑤ 4,500-6,000평 미만　⑥ 6,000-9,000평 미만　⑦ 9,000평 이상

A8>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엇입니까? (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참 고 문 헌

김동원, 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농촌경제』, 24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동원, 박혜진. 2005.『2004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연구자료 D1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김정호. 1999.『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연구보고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최경환. 2002.『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연구』연구보고 R4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석두, 황의식. 2002.『농지소유 및 이용 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연구보고 R4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보고 R4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농가경제통계』각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2005.『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연구자료 D207 | 2006.3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3.
발 행 2006. 3.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02-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